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스무 가지 목소리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스무 가지 목소리

충남 탈석탄 이해관계자 가상인터뷰 사례집



## 들어가는 말

충청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는 1983년 보령화력 1·2호기, 1984년 서천화력 1·2호기, 1995년 태안화력 1·2호기, 1999년 당진화력 1·2호기 등 시간적 차이를 두고 4개 시·군에 건설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설되었습니다.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전까지 보령시, 태안군, 당진시에서는 각각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2017년 서천화력 1·2호기가 폐쇄되었으나 2021년에 신서천 1호기가 새로 준공됩니다.

충청남도는 2017년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하고 2018년 3월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비전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초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시민사회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과 수명연장 계획에 반대하면서, 2022년 5월 폐쇄 예정이던 보령화력 1·2호기를 2020년 12월까지 앞당겨 폐쇄하고 모든 석탄발전소에 대해 단계적인 폐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산업이 미약한 지역에서 석탄발전산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본사를 지역(보령시, 태안군)으로 이전하면서 발전소 입지 지역을 ‘석탄발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충청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 및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는 탈석탄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중심이 된 지역경제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충청남도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등의 정책에 맞춘 새로운 지역경제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는 2020년 1월 정의로운 전환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충남연구원에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은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정의로운 전환 사례와 국내 폐광지역과 원전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함께 충청남도 내 발전공기업, 노동자, 시민단체, 주변지역 주민, 행정, 시·군 의회 등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산업 다양화 전략, 노동자 지원 전략, 지역사회 지원 전략, 복원·재생 전략, 추진기반 조성 전략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다섯 가지 전략 제안은 시·군, 발전공기업, 노조, 시민단체, 주변지역 주민 등과 공유된 상황은 아닙니다. 시·군별, 주체별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구상과 전략을 마련하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및 시·군 행정에서도 에너지, 환경, 경제, 복지, 문화, 공동체 등 다양한 부서와 기관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충남연구원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기초로 하여, (주)지역콘텐츠발전소에서 스무 명의 가상 인물을 인터뷰 방식으로 보여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스무 명의 가상 인물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 지역사회 내 주민·단체·리더, 도시재생·사회적경제·마을만들기 활동가들로 설정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가상 인터뷰 글을 작성하고 책자를 제작한 (주)지역콘텐츠발전소를 비롯하여 실제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이 책자에서 정리한 페르소나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01_석탄취급설비 노동자	10
02_경상정비 노동자	16
03_플랜트 노동자	22
04_항만하역 노동자	28
05_청소 노동자	34
06_발전사 정규직 노동자	40
07_발전사 신재생에너지 담당자	46
08_노동조합 활동가	52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09_발전소 인근 어민	60
10_개발위원회 임원	66
11_환경단체 활동가	72
12_시민단체 활동가	78
13_지방의회 의원	84
14_기초지자체 공무원	90
15_지역신문 기자	96
16_청소년	102



대안을 꿈꾸다

17_사회적경제 활동가	110
18_도시재생 활동가	116
19_마을만들기 활동가	122
20_마을리더가 된 광부	128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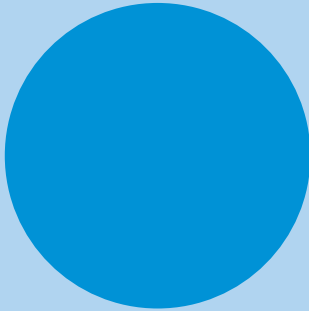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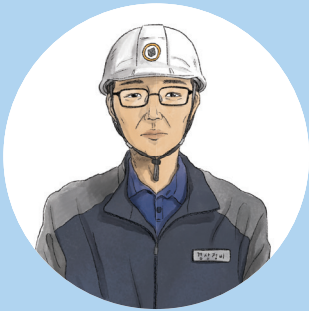
- ▶ 이 책자는 충청남도가 발주하고 충남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 에너지전환 타당성 연구, 2차년도)의 일환으로, 탈석탄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색해 한 사람의 페르소나로 표현하였습니다.
- ▶ 각 페르소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여러 지역(당진, 보령, 태안 등)의 특징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 명칭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 석탄화력발전소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등 실제 인물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정은아(2020)가 수행하였으며, (주)지역콘텐츠발전소에서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 인터뷰 내용이 부족한 경우 기사, 논문, 출판물,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은 책자 말미에 붙여두었습니다.
- ▶ 이 책자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충남연구원(202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스무 가지 목소리 : 충남 탈석탄 이해관계자 가상인터뷰 사례집.





# 1

##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 01\_석탄취급설비 노동자
- 02\_경상정비 노동자
- 03\_플랜트 노동자
- 04\_항만하역 노동자
- 05\_청소 노동자
- 06\_발전사 정규직 노동자
- 07\_발전사 신재생에너지 담당자
- 08\_노동조합 활동가



# 이 석탄취급설비 노동자

---

나	이	20대 후반
성	별	남성
직	종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소속 석탄취급설비 담당
업	력	3년차

---

특	징	타지역 공고 출신으로 충남의 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자리를 얻음. 일이 힘들어 그만두는 또래 친구들이 많지만 성실하게 버티고 있음. 화력발전소 폐쇄를 대비해 LNG, 신재생에너지 분야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음.
---	---	---





#석탄취급설비 #20대 #남성

## "열악한 작업환경...신재생 기술 배워서 옮길까 고민"

오래 일한 선배들이 더 걱정, 임금과 고용 보장돼야

20대인 안 씨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의 한 협력업체에 다닌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전시설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은 공기업인 발전사가 담당하고 발전시설까지 석탄을 운반하는 석탄취급설비(연료설비)와 전기와 기계 전반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석탄재, 황 등 부산물을 처리하는 환경설비 등은 보통 협력업체에게 맡겨진다.

2019년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령, 당진, 태안의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은 경상정비 부문 3,667명, 연료환경설비운전 부문 2,553명이다.

멀리 부산 출신인 안 씨는 지역 공고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우연히 석탄화력발전소 구인 정보를 알고 들어오게 됐다.

"연봉이 비교적 높다는 말을 듣고, 멀지만 여기로 와서 일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기본급이 아니라 교대근무로 인한 수당이 많이 붙어서 그런 거였지만요. 발전소에서 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일해요. 고등학교 때 용접 자격증 같은 걸 따놓긴 했는데 여기 와서 필요한 공부는 다시 했어요. 처음엔 지역문화도 다르고 현장일 적응하는 데 고생 좀 했죠."

예전에는 안 씨처럼 젊은 청년이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인력을 늘였고, 협력업체 신규채용에 지원자가 몰려 30: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들의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최근에는 대졸자들도 많이 입사한다.

## "젊은 사람들이 일찍 그만두는 직장이지"

안 씨가 일하는 곳은 석탄취급설비이다. 항만으로 들어온 석탄이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발전소로 운반되고, 미분 처리를 통해 가루로 만들어져 보일러실까지 운반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석탄은 발화하기 쉬운 물질이다. 기계에 엉겨 붙거나 떨어져 수시로 잔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낙탄을 처리해야 한다.

"자동화된 다른 플랜트 설비들은 그냥 수치 확인하고 힘쓸 일이 많이 없는데 석탄 화력 쪽은 안 그래요. 삽질을 하고 각종 발전설비와 터빈을 돌리고 청소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도 많아요. 연료설비라는 게 다른 설비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공정을 지나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거라 설비와 부속들에서 항상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설비, 기계, 전기까지 전체적인 것들을 배워야 하더라고요."

안 씨는 4조 2교대로 일한다. 4개 조가 주간 근무, 야간근무를 12시간씩 돌아가며 하는 셈이다. 주간 근무 두 번, 야간 근무 두 번 하고 비번 휴가로 쉬게 되는데 일하는 시간 대가 계속 바뀌다 보니 몸 챙기는 것이 쉽지 않다.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면 교대, 야간 근무는 몸이 많이 상하는 일 같아요. 수면리듬이 들쭉날쭉해지고 휴가를 낼 때 대근자를 찾는 것도 좀 눈치 보이고. 주말에도 일하다 보니 친구들 경조사 챙기는 것도 좀 어렵죠."

안 씨는 도심지역에 살면서 발전소까지 출퇴근을 한다. 타지 출신 직원들은 발전소 주변에 함께 숙소를 구해 생활하기도 하지만 도시 출신인 안 씨로서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았다.

"또래를 만나 술이라도 한 잔 하려면 20~30분은 나가야 하는데 돌아올 때 대리비나 택시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젊은 저희에겐 문화생활도 중요하거든요. 큰 도시에 비해 즐길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취미생활을 해서 친구들을 좀 사귀었는데 지역 친구들도 화력발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들죠. 유튜브 보고 온라인 강의 듣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처음 입사했을 때 안 씨는 또래에 비해 초임도 높고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일을 할수록 열악한 작업환경과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답답함을 느끼



게 되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신규채용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려고 하는 또래들이 많아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죠.”

연료설비 현장은 석탄이 수시로 떨어지고 날리는 곳이어서 유해물질이 가득하다. 소음도 문제다. 하루 종일 기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상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노라면 자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실제로 오래 일하신 분들 중에는 이명증이나 난청, 호흡기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다. 무엇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컨베이어 벨트 기계 옆의 통로가 좁고 어두워서 기계 사이에 옷이 끼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그나마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야 2인 1조 근무를 하게 됐다.

“청소하시는 분들 빼고는 대부분이 남자들이어서 수직적인 직장문화를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다시 군대를 들어온 기분이에요. 여긴 또 소속이 어딘지에 따라 임금이나 대우, 하는 일의 차이가 너무 커요. 김용균 씨를 포함한 사망사고가 많은데 여전히 개인의 행동 탓으로 돌리고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가려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든 아니면 더 수당을 주고 가려 뽑든 교육하든 뭔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런 건 외면하고 개인의 부주의 탓만 하는 건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공부 좀 해서 공기업이나 여건이 나은 곳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다. 일은 힘들고 전문성은 생기는 것 같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나가니까 계속 남아있는 자신이 이상한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또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다시 정규직화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 더 남아 보자 싶을 때도 있다.

### “어려운 환경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을 꼭 배려해 주길”

안 씨가 일하는 석탄취급설비 분야는 석탄화력발전소 안에서만 필요한 일이라 LNG나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고용이 가장 불안해진다. 안 씨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저도 일하고 나서야 알았지만 사람들이 전기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어요. 발전플랜트라는 게 관련된 분야가 다양하고 당장은 없앨 수 없는 분야 같아요. 전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쓸 수는 없잖아요? 요즘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따면 나중에 다닐 수도 있겠죠.”

도시 출신인 안 씨로서는 LNG가 도시 지역에 지어지면 좋다. 하지만 오래 일했던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 자리에 지어도 좋겠다. LNG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될 때 고용 유지를 위해 5조 3교대도 검토한다던데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임금이 줄어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불안하다.

안 씨는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자신과 같은 20대 청년들에게 다른 일을 할 기회는 아직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힘든 데서도 일했는데 못 할 일 없겠냐 싶기도 하다.

“세상은 바뀌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생겨나는건데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 맞춰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게다가 안 씨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따로 있었다. 여행을 좋아해서 관광업이나 숙박업 쪽에서 일해 보고 싶었다. 당분간은 발전소 일을 할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나이 드신 분들 얘기는 다르다.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10여 년이 넘게 해왔다. 몸이 상해가면서도 그 일을 해왔던 건 가족들의 생계가 걸렸기 때문이다. 안 씨가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에게 ‘지금 해오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달라진 세상에 맞춰가세요’라고 하는 건 가혹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찬성하지만 그 과정 안에 분명 나이 많고 오래 일하신 분들의 일자리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긴 시간 반복적으로 경험을 쌓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보다는 확실한 게 필요해요. 임금과 일자리를 보장하면 능력이나 교육은 따라오지 않을까요?”



# 02 경상정비 노동자

---

나	이	50대 초반
성	별	남성
직	종	경상정비 협력업체
업	력	15년

---

특 징 연료설비 운전에서 경상정비로 전환해, 15년 간 일해  
옴. 가족들과 읍내에 살고 있으며 경쟁입찰제 도입 이후  
고용이 불안해짐. 석탄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다른 분야  
로의 재취업에도 불안함. 타 지역으로 전환배치 되는 데  
에도 거부감이 있음.





#경상정비 #50대 #남성

## "이 나이에 새로 배우고 재취업하는 건 어려워요"

생계가 걸린 현장, 성능개선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되길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는 발전소의 수명연장과 돌발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영역으로 가동 중에 계속 필요한 업무 영역이다. 정비인력이 항상 상주하여 가벼운 고장 수리와 운전시간에 따른 정비업무,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정비 업무, 돌발 고장 시 긴급 복구 등의 업무를 한다. 50대 초반인 김 씨도 이러한 경상정비 협력업체 중 한 곳을 다니고 있다.

“다양한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부품을 점검하는 일들이 중요하죠. 항상 눈으로 확인하고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교체하는 일을 합니다.”

김 씨가 이곳에서 일한 지는 15년이 되어 간다. 설비 기계를 다루는 일을 ‘운전’이라고 하는데 김 씨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한동안 연료설비 운전원을 했다. 그러다 계열 전환을 하여 정비부서로 옮기며 다른 설비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필요한 발전정비사 자격증이나 용접기사 자격증은 일하면서 하나씩 취득했다.

“설비에도 다양한 영역이 있죠. 보일러 본체, 연소설비, 통풍설비, 미분탄 연소설비, 회처리설비, 전기 집진기설비, 오폐수처리설비, 고압전동기설비 등등이요. 협력업체 가운데 큰 데는 전자, 발전기 이런 거까지 다하고 작은 데는 나눠서 받습니다.”

충남지역에 있는 경상정비 협력업체만 43곳, 2,130여 명이 종사한다. 지역업체들은 10~30명 내외로 대부분 영세하지만 한전산업개발이나 한전KPS처럼 전국에 사업장이 있는 큰 규모의 업체들은 지역별로 100~200여 명이 근무한다.

지역 출신인 김 씨는 같은 지역 출신인 부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딸을 두었다. 젊은 시절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생계가 어려울 때, 지인의 소개로 이 일을 알게 되어 30

대에 입사했다. 읍내의 아파트에 살며 같은 업체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한다.

“애들이 점점 커갈 때여서 고정적으로 벌어야 할 일이 필요했어요. 보통 7급으로 지역주민들이 채용되고 5, 6급도 조건이 될 경우 지역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였어요. 저처럼 좀 늦은 나이에 입사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 3년짜리 비정규직...경쟁입찰 과정에서 인건비 착복도

2002년 이후 전력·발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발전정비산업의 외주화·민간 개방 확대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비업무도 외주화 되어 협력업체들이라고 불리는 민간 정비회사들에게 하청을 주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협력업체여도 고용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인식은 발전사 운영에 경쟁입찰제가 도입되면서 바뀌었다. 3년의 고용이 보장되었지만 협력업체가 입찰에서 떨어지면 다른 회사로 가야 했다. 그럴 경우 임금을 예전 수준으로 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전 경력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최저가로 경쟁하는 입찰 과정에서 인건비가 깎이는 경우가 많다.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을 최대한 낮춰 잡아서 입찰을 넣어놓고, 업체 측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의 수법이 횡행했기 때문이다. 입찰이 되어도 직원을 더 구하지 못해 결국 다시 예전 업체가 낙찰된 사례도 많다.

“협력업체 소속 정직원이니까 정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협력업체는 발전사의 모든 설비를 빌려 쓰는 처지라 계약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3년짜리 비정규직이라고 봐야겠죠. 지역 출신들이 많다 보니 회사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기관화가 검토되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석탄화력발전사업 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그동안의 발전정비산업의 외주화와 민간개방 과정에서 정비 기술력 향상이나 발전 효율성이 나아졌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경쟁입찰에 따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노동인권 침해는 심해졌다고 하청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



영,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적극 검토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논의를 위해 발전 비정규직 대표자회의 형태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경상정비 업무는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되어서 파업권이 제한될 만큼 업무의 공공성이 높다. 최근에는 연료환경설비 분야만 공공기관화를 추진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계약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예상했던 일입니다. 언제나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다는 설비의 안정과 효율을 우선해왔으니까요. 그 뒤로 나아진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보입니다. 발전사들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서류적으로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성능개선과 LNG로의 단계적 전환으로 일자리 유지 원해

김 씨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던 만큼 지역이나 일에 대한 애착이 높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섣뚱 동의하기 어렵다.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기도 하지만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시설개선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면 최근 건설한 발전소와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석탄화력에너지를 대체할 만큼 충분히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태양광을 논밭이나 산림에 설치하면 그건 그것대로 자연파괴를 하는 것이고 수명이 다하면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를 처리하는 시설이나 기술도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바꾸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무엇보다 김 씨가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다. 자녀들이 이제 다 컸고 부인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함께 벌고 있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이며 여전히 돈 들어갈 곳은 수두룩하다. 이제 50세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로 인해 기껏 배운 기술로 정년도 채우지도 못하고 그만두게 될까 봐 걱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0여 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그 발전소에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다시 취업하기 어려운 저 같은 사람들요. 이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재취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김 씨처럼 석탄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고용안정 차원에서 LNG발전소로의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LNG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이 연료를 태우고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비가 비슷한 것도 많아 상대적으로 넘어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재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전환분야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성격이 많이 달라지는 연료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되면 경상정비 쪽이나 다른 업무로 바뀌어서 보수교육을 한 다음에 LNG 발전소로 전환 배치되기를 바라니까요. 인력 공급은 더 넘치게 되는 것이라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환배치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김 씨는 기왕이면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LNG 발전소가 들어왔으면 한다. 퇴직 이후의 삶도 고민해야 할 나이다. 부인의 일도 있고 친구와 지인 등 네트워크가 풍부한 고향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

“타 지역으로 전환 배치한다면 사실상 많은 가정이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다 따라간다고 하면 안 그래도 줄어드는 지역 인구가 더 줄어들겠지요. 발전소를 짓는 것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예정된 기간을 다 못 쓰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런데다 새로운 부지를 찾아 지역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성하면 나라 세금이 또 들어갑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연관이 안 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면 좋겠습니다.”

김 씨와 같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크기에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맨 아래 피해 보는 사람은 보지도 않고 결정했다가 정말 죽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면 논의해보자고 해요. 결국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환경, 에너지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공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처럼 생계가 달린 사람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 03 플랜트 노동자

---

나	이	40대 초반
성	별	남성
직	종	플랜트 배관(플랜트 건설 및 오버홀 공사)
업	력	8년

---

특    징    인문계열 출신이었으나 용접일을 새로 배워 일을 시작. 보조공으로 일하다 3년 반 만에 인정받아 기능공으로 일함. 경기도에 가족이 살고 있지만, 전국을 다니며 일을 해야해서 월세방을 얻어 생활함.





#플랜트 #40대 #남성

## "기본소득 같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플랜트 노동자는 숙련된 기능공...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야

40대 초반인 정 씨는 플랜트 노동자다. 대규모 생산시설이나 공장을 ‘플랜트’라고 하는데 플랜트의 주요 설비를 설치하고 제작하는 일은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된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자격증이 있어도 현장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 일하는 공간과 인원의 제약이 있어 일반 토목건설 노동자에 비해 임금 수준도 높고, 노조 참여도도 높은 편이다.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의 주요 일터는 여수, 울산의 석유화학플랜트나 포항, 광양의 제철소,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등이다.

“충남지역 플랜트 노동자들은 서산의 석유화학단지, 당진 제철단지 그리고 화력발전소 등에서 일해요. 일부는 아산 탕정이나 평택 고덕 등의 반도체 설비공사에 투입되기도 하죠.”

충남 플랜트 노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3,000여 명이고 조합비를 납부하며 1년에 8개월 이상 일하는 조합원은 5,000~7,000명 수준이다.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은 발전소에서만 일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노조 조합원의 20~30% 정도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한다고 추정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일은 기본적으로 보일러와 터빈 설치가 메인이다. 플랜트 배관, 기계 설치 직종, 철제 구조물 설치에 제관 직종 노동자가 투입된다. 이밖에 전기설비와 배전, 계장 등의 계전 직종, 보일러관 등에 보온설치 직종, 그리고 이 모든 직종이 일할 수 있는 발판과 난간 안전장비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비계 직종이 있다.

“발전소 건설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긴 편이에요. 2013~2014년에 당진과 태안에서 2~3개씩 발전소를 지을 때는 4,000여 명이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었죠.”

정 씨는 경기도 출신이다.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취업이 어려워 30대 초반에 용접 기술을 배워 플랜트 배관 일을 하게 됐다. 일한 지는 8년이 되어간다.

“처음에는 보조공으로 들어와서 일했죠. 3년 만에 반장에게 인정받아 기능공 일을 하게 됐어요.”

정 씨처럼 기능공이 되는 데는 보통 현장에서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1년 만에 기능공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고 10년 동안 보조공으로 일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플랜트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면을 이해하고 실물 크기 치수로 나타내는 현지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용접공의 경우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자르고 붙이고 연결하기 때문에 금속의 성질도 이해해야 하고요. 용접공은 현장별로 매번 시험을 치고 결함 여부를 평가받아요. 결함 비율이 높으면 알아서 퇴사하는 것이 불문율이죠. 이건 용접이 아닌 다른 기능공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을 태운 고온의 열기로 보일러 튜브에서 물이 증기로 바뀌면 그 증기의 압력으로 터빈이 돌며 전기를 발생시킨다. 수천 개의 튜브 중에 하나라도 파열되면 발전기가 멈추고 전력 생산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보일러 용접이나 배관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최근에 충남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 신설공사를 한 것은 신서천발전소 한 곳뿐이에요. 지금은 LNG나 부산물을 이용하는 소규모 복합화력 같은 데서만 일거리가 있죠. 신설공사가 아니면 오버홀 공사가 중요한 일거리입니다.”

### 플랜트 건설과 오버홀 공사일 따라 전국 돌아다녀

오버홀이란 전기사용이 비교적 낮은 계절에 보일러를 끄고 주요 설비를 분해 조립하면서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보일러 튜브 교체나 터빈 수리하는 일이 주 업무인데 터빈 수리는 발전소 정규직이나 사내하청, 자회사 중심으로 투입되고 터빈은 대부분 수입제품이어서 해외에서 해당 업체의 기능공이 관리한다. 플랜트 노동자는 주로 보일러 튜브를 용접할 수 있는 기능공 중심으로만 투입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청소 등 일반 잡부의 형태로 지역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보일러를 끄고 5층 높이쯤 되는 곳까지 발판이 설치되면 그곳을 돌아다니며 보일러



튜브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교체해야 하죠.”

재가동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없으려면 각 단계마다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수습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1,500도의 열기로 타오르던 보일러는 꺼졌다고 해도 내부 열기는 아직 남아있어요. 방진복을 겹쳐 입고 수백 개의 튜브를 교체하고 나면 땀으로 샤워를 하죠. 게다가 보일러실에 남아있는 석탄재들 때문에 방진복을 겹쳐 입어도 몸 안으로 먼지가 스며들어요.”

오버홀 공사는 보통 한두 달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정 씨는 발전소 주변의 월세방을 구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 공사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간다.

“가족들은 경기도에 삽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딸이 있어요. 충남 지역 일을 주로 하지만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교육환경이 좋지 않죠. 일이 없을 때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다니는 것이 낙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힘든 일을 해야 하지만 정 씨는 발전플랜트를 만드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어릴 적에는 애들을 한참 만에 보곤 하니까 낮가리고 저를 어색해하던 때도 있었어요. 좀 크면서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발전소에서 ‘아빠의 날’이라고 해서 가족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아빠가 일하는 현장을 직접 보여 주고 설명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정 씨와 같은 플랜트 노동자들의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플랜트 노조 충남지부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48.6세다.

“40~50대 중장년층도 늦게 들어와서 보조공으로 일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무거운 철근을 들고 위험한 곳을 오르내려야 하는 비계 직종이나 분진이 많은 보온 직종에서 젊은 사람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LNG 전환은 단기 처방일 뿐,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 필요

정 씨는 탈석탄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한다는데 찬성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희는 LNG나 다른 발전소에서도 수요가 있는 업무이기에 연료설비나 경장정비 협력업체에 비해서는 걱정이 덜한 편입니다. 원래도 발전소에서만 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화력발전소 공사가 충남지역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주요 일거리였기 때문에 확실히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오버홀 같은 유지보수 업무도 줄어들고 신설공사도 화력발전에 비해 투입되는 인력이 줄어들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걱정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LNG발전소 건설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희망한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중간다리로 미세먼지가 적고 상대적으로 열효율이 높은 LNG 비중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건설 수요가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새로 생길 LNG발전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안에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저희 같이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이야 도심지역이면 더 편하고 좋겠죠. 하지만 지역경제나 다른 협력업체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지역 안에 LNG발전소를 유치했으면 합니다.”

LNG도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정 씨는 기본소득 도입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이 변하는 시기에 노동자들도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적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 중심 체계에 비해 인력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교육이나 고용 안정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패러다임이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처럼 지금의 경제적 의미와 전혀 다른 인간의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등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04 항만하역 노동자



---

나	이	50대 후반
성	별	남성
직	종	석탄하역,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연락소 소속
업	력	30년

---

특    징    항만 부두 근처에서 혼자 생활함. 지역 출신으로 젊었을  
적 힘이 좋아 동네 씨름대회에서 상도 받았음. 공사장 막  
일을 하다 항만 건설일을 했고 항운 노조에 가입함. 항운  
노조에 대한 자부심이 있음.





#항만하역 #50대 #남성

## "석탄 항만하역 노동자, 발전소 폐쇄되면 갈 곳이 없어"

시간 다투는 하역 작업, 임금 줄어도 상용화 선호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석탄은 발열량이 높은 유연탄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무연탄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은 대부분 바다를 통해 들어온다. 이를 화물선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역 노동이라고 한다.

예인선이 거대한 석탄운반선을 부두까지 이끌어 접안시키면 커다란 해양 크레인이 공중에서 하역기를 조립해서 설치한다. 신호수와 운전수가 이동형 연결통로인 갱웨이를 건너 선박에 오르면 거대한 하역기 스크루가 석탄을 빨아들이는 작업이 시작된다.

“배가 들어오면 연락소로 전화가 와요. 몇 명 어디로 보내 달라고. 그럼 반장이 조를 짜서 나가게 되는 거죠.”

출렁이는 바다, 높은 배 위에서 이 씨는 밧줄에 몸을 묶고 석탄이 쌓인 아래쪽을 예의 주시하며 하역기 운전수에게 신호를 보낸다.

‘유연탄’은 말 그대로 연기가 나는 석탄이다. 다량의 휘발분을 함유하고 있어 불이 붙기 쉽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분과 고열로 딱딱하게 엉겨 붙는가 하면 연기를 내며 자연 발화하기도 한다. 석탄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도 심해 최근에는 선원들이 중독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배 위에서는 이런 위험을 대비해 상황을 살피며 살수차를 이용해 불을 끄거나 하역기가 출렁이는 배에 부딪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참 석탄을 뽑아 올리고 서서히 바닥이 드러나면 잔여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포클레인 등의 중장비와 사람들이 투입된다. 한쪽에서 커다란 스크루가 돌아가는 중에도 굴작기며 사람들이 움직이며 석탄을 모으고 싣는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항상 기계를 보고 있어야 돼요. 기계에 등을 돌리는 순간 아차 한다니까요.”

하역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하역작업이 지체될수록 운송회사 측에 비용과 손실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체선료의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일단 배가 들어왔다 하면 밤을 새우며 작업을 해요. 배가 머무르는 게 돈이니까요. 실내도 아니고 뜨거운 땡볕에서 석탄과 기계의 열기를 받으면서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이 힘든 만큼 수입이 괜찮았죠.”

안개가 끼는 날에는 석탄에 불이 붙어 나는 연기를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추운 겨울, 철판에 살얼음이라도 끼면 배 위로 바닥이고 미끄러워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 52시간 시행, 야간작업 최소화 등을 하면서 하역 기간이 길어졌다. 노후된 부두 상황과 기계고장으로 인한 작업 지연도 변수다. 유연탄이 기계에 끼거나 석탄 사이에 섞여 들어온 철 조각 같은 불순물이 고장을 일으키는 일도 다반사다.

석탄 운반선이 정박해 있는 동안 병커C유를 연료로 엔진을 가동해 하역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문제도 있다. 2019년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량 중에서 대형 선박 배출량이 3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최근 발전사들은 생산된 전력을 선박에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어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하역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체선료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발전사마다 낸 체선료만 해도 각각 200억 원이 넘었다.

“비용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하게 해야 하고, 또 지체 없이 해야 하고.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되죠.”

### 공급권을 갖고 있었던 유일무이한 항운노조

하역 노동은 그 역사가 깊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하역 노동은 노조 결성의 출발점이었다. 우리나라도 1897년 청진항에서 항운노조가 결성됐다. 부두에서 석탄이나 화



물을 배에 선적하고 하역하는 일은 항운노조만이 할 수 있다. 항운노조는 노조이면서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항운노조 위원장은 사용자 지위는 물론 채용권과 인사권까지 있다.

이 씨가 항운 노동을 한 지 30년이 되었다. 지역 사람인 그는 젊었을 적 씨름을 했을 정도로 동네에서 힘이 좋기로 소문이 났다. 지역 공고를 졸업하고 공사장 막일 등을 하다 항만 건설현장을 알게 되어 항운노조 조합원이 되었다.

“작업량이 있으니까 정원을 제한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한경대에서 산업체 위탁교육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들었죠. 지금은 항만연수원에서 안전교육이나 기능교육을 시켜요. 줄 고정시키는 작업 같은 것도 배웁니다.”

충남지역에는 충남서부항운노조와 당진항운노조가 있다. 충남서부항운노조는 1930년에 장항에서 시작되었는데 조합원이 1,000명을 넘는 적도 있었다. 현재는 보령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조합원수는 220명 정도다. 당진항운노조는 2009년 독립해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은 200~300명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하역업체가 항운노조에 근로자 파견을 요청하면 작업 후 전체 노임을 지불한다. 항운노조의 해당 부두에 노무제공권(하역권)을 가지고 있는 연락소는 받은 노임 중 일부를 조합비로 내고 연락소장과 조합원의 인원대로 똑같이 나눠가졌다. 이 같은 방식을 도급제라고 부른다.

“연락소 한 곳에 속하면 다른 곳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석탄하역은 재해발생률이 높아 하역 노동자들도 기피하는 업무예요.”

항운노조는 석탄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하역작업을 할 수 있다. 연락소를 통합해서 순환 배치하며 일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화력연락소를 따로 운영한다. 다른 쪽 일을 하기가 어려운 화력연락소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 희망퇴직, 상용근로자 전환, 전환배치...대안이 없다

전국항운노조연맹이 화력연락소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 희망퇴직이나 상용근로자로의 전환, 전환배치 등의 대안이 거론된다.

“저처럼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자연감소가 많이 될 겁니다. 생계안정지원금을 받고

일찍 퇴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90%는 지원금을 다 잃고 일자리 찾아 다시 오더라고요. 큰돈이 한꺼번에 생기면 금방 잃어요. 월급을 지금보다 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상용화로 남아있기를 바라죠.”

상용화는 도급제가 아니라 하역회사 소속이 되는 것이다. 도급제에 비해 노임이 줄고 업체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우려가 있다. 지역마다 하역업체와 조합원들이 교섭해서 상용화 여부를 정한다.

“화력발전소를 연차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하니 일하는 입장에서는 좀 적게 받아도 안정적인 상용화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도급제 때는 연락소 노동자들 다 똑같이 받았는데 이제는 월급을 조금씩 다르게 받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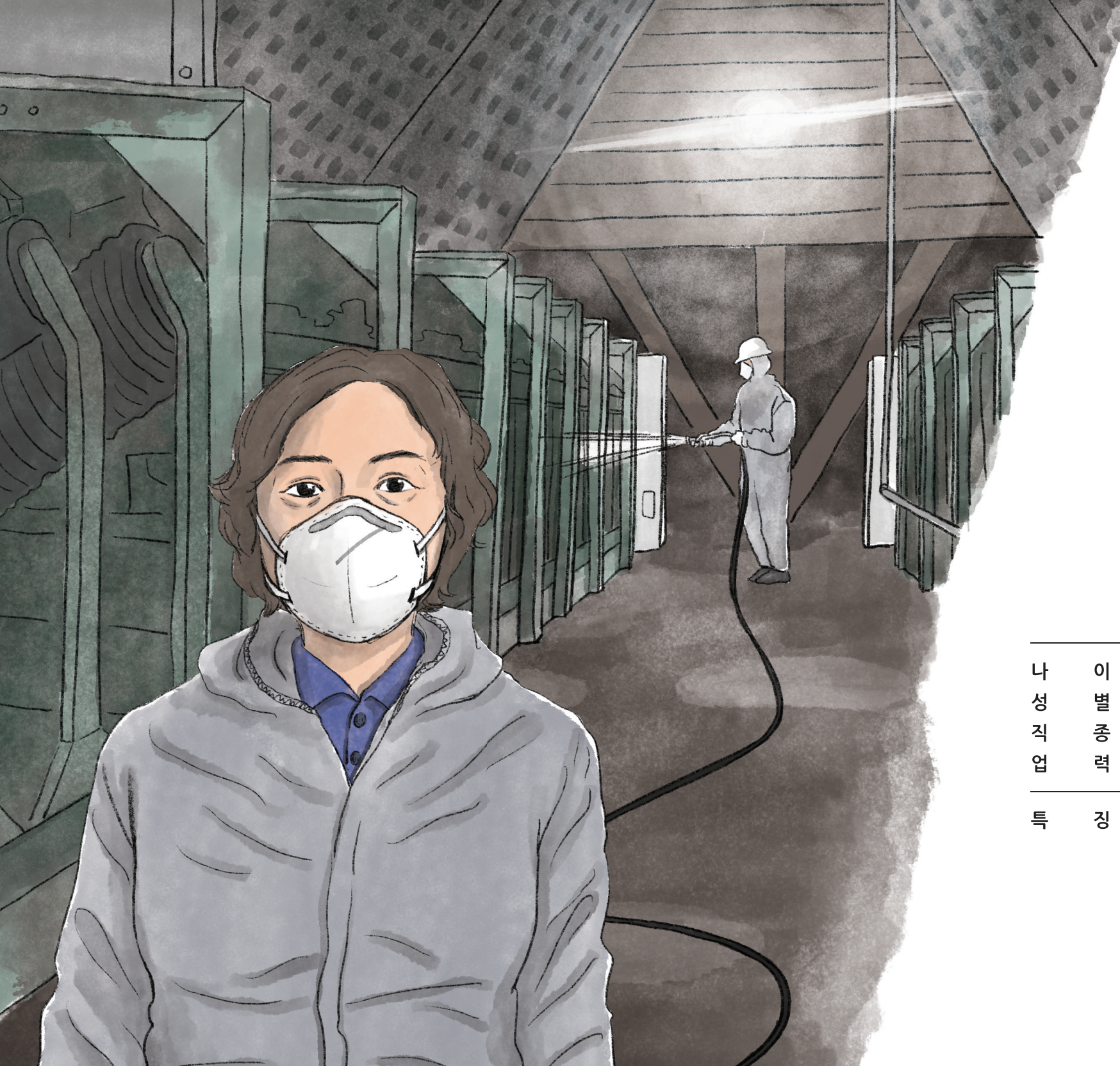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젊은 항운 노동자들은 일감이 있는 연락소로의 전환배치를 더 바란다. 하지만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연락소에서 동의를 안 해 주겠죠. 어떤 위원장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LNG선 하역은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에서 하고 노동자도 따로 연락소가 있으니까요. 석탄하역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 씨는 부두 근처에서 혼자 산다. 30km 떨어진 고향 농촌에는 80이 넘는 노모와 동생 부부가 살고 있다. 농기계야 틈틈이 해왔으니 정년퇴직하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생각도 있다. 하지만 힘든 하역 작업을 끝내고 부둣가에서 막 썰어낸 낙지에 소주 한 잔 하는 낙을 조금은 더 누리고 싶다.

“어릴 적 농촌에 살면서는 이렇게 가까운 데 바다가 있는 지도 몰랐어요. 젊었을 적에는 나중에 죽으면 항상 땅에 묻히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매일 바다를 보니 이제는 죽으면 바다에 뿌렸으면 좋겠어요. 일하면서 큰 배들이 오고 가는 바다를 보는 게 좋아요. 죽으면 여기다 뿌려달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 05 청소 노동자

---

나	이	50대 후반
성	별	여성
직	종	청소업 (자회사 소속)
업	력	7년

---

특	징	지역 출신. 농사짓다가 노후자금 보태려고 주변의 언니들과 청소일을 시작함. 청소라고 하여 쉬운 줄 알았으나 해보니 위험한 일이라서 그만둘 생각도 했었음. 자회사가 되면서 병가도 생기고 처우가 약간 나아짐.
---	---	--





#청소 #50대 #여성

## "몸에 안 좋은 거 보면 탈석탄 해야겠죠"

열악한 작업환경...고용 보장되는 에너지 전환 기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를 추진하면서 발전소에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사는 경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방재 부문 노동자를 중심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했다. 이중 충남지역의 동서발전은 EWP서비스, 서부발전은 코웨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고, 중부발전은 중부발전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지만 소방방재 분야는 협력업체가 맡고 있다. EWP서비스와 코웨포서비스, 중부발전서비스 등의 채용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500여 명이다. 박 씨도 이중 한 곳의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다.

“보통 청소인력이 가장 많고 경비, 시설관리와 소방 등의 업무가 있어요.”

청소노동자들은 사무실 청소, 발전동 청소, 발전소 내 공공근로 제초작업과 발전소 외부 청소까지 다 맡는다. 석탄으로 인해 먼지가 쌓인 공간과 기계 사이를 구석구석 청소해야 하는데 사업소에 따라 청소 주기는 다르다.

50대 후반인 박 씨는 남편과 농사를 짓고 살았다. 땅이 크지는 않아 자신은 다른 데 농사일을 거들거나 제초작업 등을 틈틈이 했다. 그러다 2014년 신규 화력발전소를 짓고 사람을 많이 뽑을 때 늦은 나이에 들어왔다.

“대부분은 저처럼 지역 출신이에요. 특수경비는 자격증이 있어야 해서 외지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 출신이고 청소하시는 분은 저처럼 여자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나처럼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도 좀 들어오더라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노후자금이라도 만들 겸 시작한 일이었다. 청소라고 해서 건물 내

사무실 청소인 줄 알고 갔다.

“석탄가루가 떨어지는 곳에서 직접 청소하는지도 사실 몰랐죠. 처음에 파트장이 전화 오기를 검정 신발하고 검정 바지, 검정 티를 챙겨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돈으로 사 갖고 왔는데, 안전화는 그전에 다니던 사람이 벗어놓고 간 거를 주더라고요. 아무런 안전교육도 없이 장갑하고 마스크 하나 털링 주고서 짝꿍이라는 선임자 하고 같이 투입됐어요. 그 언니가 걸레 한 자루 쥐어주면서 닦으래. 거기가 어디냐면요? 40~50도 되는 엄청 고열이 나는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터빈이라고 하는 데예요.”

### 청소 = 여성의 일 = 위험하지 않다?

발전동, 청소노동자들이 흔히 ‘파워블록’이라고 부르는 곳은 원칙적으로 방진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량을 청소해야 하는 곳이다. 청소노동자들에게 터빈 청소는 기계도 많고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인데 이곳에 신입직원들이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통과되려 투입되어 왔다. 이밖에도 미분탄 시설을 청소할 때는 어마어마한 먼지를 감당해야 하고 탈황시설에서는 물청소도 해야 한다. 위험한 기계 사이로 깊숙이 청소도구를 넣어야 한다거나 18층 높이의 계단 난간을 청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석탄회가 잔뜩 쌓인 컴컴한 회처리 시설을 치울 때는 살수차까지 동원해서 수압으로 뜯어내야 한다. 손이 닿지 않아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도구를 만들기도 한다. 화학물질 취급하는 곳에서 염산이 누출된 적이 있는데 그곳을 청소했던 분이 한 달 동안 눈곱이 끼고 피부발진에 시달리기도 했다.

“처음엔 엄청 무서웠어요. 커다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고 소리도 엄청 커서 위압감이 들기 때문에 만질 엄두도 안 나요.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면 맨날 만지게 되니까 위험에 대해 둔감해져요. 그래야 일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사고가 나면 그제야 위험했구나 깨닫고, 또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지고 그러죠.”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 점검에서 업무분장표를 보면 기계 설비 점검 이후 전반에 청소가 들어가 있다. 그만큼 석탄이 운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날리고 엉겨 붙어 기계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잦기에 수시로 사람 손으로 치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2019년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청소’라는 업무가 ‘여성의 일’이 되면서 부차적이고, 남성들보다 위험하지 않은 일로 인식되고 있



다고 지적한다.

“집에는 웬만하면 힘들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뉴스에 화력발전소 사고가 나오니까 친척들한테 연락 오고 애들한테도 하루 걸러 전화 오고. 걱정 안 하게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연락이 오죠. 담당 구역이 달라서 안 위험하다 돌려서 이야기해요.”

남성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청소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설 곳도, 씻을 곳도 찾기 힘들다. 2010년 건축법이 개정되어 여성 화장실을 의무로 설치하게 되자, 그곳에 온수기를 설치해 남성 샤워장으로 사용해 버리기도 했다. 여성들은 오전 청소를 끝내고 좁은 휴게실에서 지그재그로 누워 쪽잠을 잤고 퇴근시간이 되면 돈을 걷어 대절한 통근차량을 타기 위해 허겁지겁 씻어야 했다.

“발전동 청소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쪽잠을 꼭 자 줘야 되거든. 퇴근버스가 4시 30분에 오는데 샤워기가 부족해서 대야 갖다 놓고 교대로 들어가서 물 끼얹고 그 물에 옷 빨고 걸레 빨고 하는 거지. 정규직 남자 직원들이 쓰는 샤워장 빌려서 쓰기도 하고. 남직원들 쓴다고 안 된다 하면 여자화장실 문 닫고 씻고.”

#### 일하면서 몸 망가져 “그래도 정년까지 일하고 싶어요”

“그만둘까도 했는데 언니들이 알려주고 비품도 구해 주고 하니까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돈이 안정적으로 불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으니깐요.”

협력업체가 자회사로 전환되며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나아진 듯 보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기본급은 낮게 책정하면서 여타 수당으로 보완한 것도 많다. 오히려 경비직의 경우에는 시간 외 근로가 없어지면서 70여 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삭감되었다.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자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일시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정부 고시가 마련되어 임시적인 고용안정 효과가 있을 뿐이다.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기간은 대다수 1년으로 정하고 있어 계약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노동조건 악화 등의 우려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그래도 자회사로 전환되고부터 좋은 점도 있다. 병가가 생긴 것이다.

“예전에는 오버홀 공사 때 기계가 쉬니까 그때 몰아서 연차 쓰라고 했었거든. 그런데 몸이 쉬는 날 알아서 아프고 그러나요? 그냥 참고 다녔어. 이제 병가 생기니까 언니들

이 병원을 가요. 맨날 기계 사이에서 치이고, 숙이고 하니까 다들 몸이 지쳐서 이제 어깨, 허리 수술한다고.”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농도는 감시대상이지만 발전소 내 작업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이 겪은 석탄화력 오염물질은 심각한 수준이다.

“분진도 심하고, 제일 힘든 건 가스죠. 오바이트를 많이 해요. 나이 든 사람도 오바이트해요. 저탄장에 불 끄는 분들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자연발화가 너무 자주 나서요. 이렇게 일하면서도 몸에 안 좋으니 탈석탄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 폐쇄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다른 자회사 노동자들은 대체로 탈석탄으로 인한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발전소 담장을 따라 서는 경비, 행정동의 냉난방 등을 관리하는 시설직, 소방방재직은 필수 업무이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발전설비 안에 들어가 청소해야 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까지 다닐 사람은 많지 않으므로 사실상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박 씨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찬성하면서도 정년까지는 일했으면 한다.

“자회사가 되었으니 정년퇴직할 때까지 고용보장은 해주지 않을까요? 계속 이 일을 하고 싶기는 한데 안 되면 농사를 짓거나 해야겠죠.”



06

# 발전사 정규직 노동자

나 이 40대 후반  
성 별 남성  
직 종 발전기계직  
업 력 20년

특 징 한전에 입사하여 발전사 분리 당시 충남지역으로 넘어옴. 일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 석탄화력발전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높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와서 살고 있음.





#발전사 정규직 #40대 #남성

## "신재생에너지 대응 위해 발전사 재통합 필요"

LNG 건설시 석탄 대비 인력 30% 수준, 정원 반납 우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를 목표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6개 발전공기업으로 분리되었으나 파업과 여론에 밀려 매각은 중단됐다. 현재 이들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경영평가를 받는다. 2019년 말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는 연료별 매출에 있어 모두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58~88%로 월등히 크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동서발전에서 운영하고 보령에는 중부발전 본사, 태안에는 서부발전 본사가 있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의 중심이 충남인 셈이다.

40대 후반인 한 씨는 한전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 발전사들이 나뉘는 때 발전소 중 한 곳으로 넘어왔다. 발전기계 직군으로 교육받았고 현재는 운전 업무를 한다. 일한 지 20년이 넘어 기계직군으로 안 해본 일이 없다.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발전사의 메인설비라고 통칭하는 보일러, 터빈, 발전기 운전과 전체 공정 관리 감독입니다. 업무는 대략 기계, 화학, 통신, 사무 분야로 분류되고 입사할 때 기본 교육을 받죠. 운전 업무는 보통 교대근무로 하고 유지 보수 업무는 통상업무로 합니다.”

발전소 수리에는 건설, 오버홀 공사, 경상정비 등의 업무가 있는데 기계정비직이 플랜트를 건설해서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경상정비 쪽 업무가 된다. 한 씨는 복잡한 설비를 다루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자부심이 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주로 감독이죠. 기계팀이나 계측제어팀만 직접 정비하고 나머

지는 협력업체에게 맡긴 것을 감독하는 거죠.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고 관리 금액 등을 지불하는 일도 하고요. 오버홀 공사를 할 때 터빈 같은 거 점검하는 일은 정말 큰일이죠. 볼트 하나 분해하는 데도 700도의 열이 필요하고 성인 남자 5명이 함께 힘을 써야 해요. 20만 개 부품을 일일이 점검하고 교체한 다음 다시 점화가 제대로 될 때는 정말 뿌듯하고 보람 있습니다.”

### LNG 발전소는 정주여건 나은 도심 지역에 설치되길

정규직들에게 충남지역 발전소는 비선호지역으로 꼽힌다. 중부발전은 서울이나 울산, 세종, 아니면 도시 근처의 사업장을 더 선호하고 동서발전은 일산, 울산뿐만 아니라 호남이나 동해보다도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병원, 생활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석탄화력이 주요 업무라는 특성도 있다.

“집은 보통 사택에서 살아요. 여기는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90% 정도는 혼자 와서 산다고 보면 됩니다.”

한 씨 역시 5년 전 충남지역으로 발령받아 사택에 혼자 살고 있다. 통상 근무할 때는 주말에 버스를 타거나 차를 몰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 다녀오고 교대근무를 할 때는 쉬는 날에 움직였다.

발전사들은 8~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일정 비율로 순환하여 배치한다. 업무의 긴장감을 높이고 직원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이다. 하지만 충남에 오면 다른 곳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환배치보다 긴급해서 이동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들어와서 다시 스터디를 한다더군요. 지역난방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곳에 시험 봐서 나간다고요. 한 곳에서만 한 해에 수십 명씩 나가기도 합니다.”

발전사 정규직들 사이에서는 충남에 있는 본사 이전이 어렵다면 LNG발전소 신설은 정주여건이 나은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도 많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 수송과 냉각수 확보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LNG는 배관으로 연료를 조달하고 석탄화력만큼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하진 않으니가 도심 지역에도 많이 유치되고 있는 추세이죠.”



정부의 탈석탄 정책기조에 대해서 발전사 정규직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발전사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중 한 곳에 가입되어 있는데 한국노총은 탈석탄 정책에 상대적으로 우려를 많이 표시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탈석탄정책이 불가피성을 수긍하고 타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 씨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LNG도 사실 근본적인 기후 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용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간다리로 생각하는 거죠.”

정책적 편의성만 노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폐쇄할 예정인 화력발전소에 환경설비 계획과 옥내 저탄장 설치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만 3,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민간업체라면 하지 않을 일을 공공기관이기에 하는 겁니다. 또 신규 석탄화력설비 건설은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업체에 풀어주고 있단 말이죠. 가스 직도입도 민간에만 허용해 가격 불공정을 유도합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국민 눈치 보느라 전기 가격은 낮게 하니 한전이 적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발전사 부채가 많아지는 것을 또 방만 경영으로 비난받습니다. 발전사 인건비는 5%도 안 되는데 말이죠.”

한 씨와 같은 발전사 노동자들은 에너지의 공공성을 주장한다.

“전력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력의 60%는 안정적으로 공공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력수급을 위한 LNG발전, 석탄 화력 성능개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속도 조절 등 전반적인 정책이 조율되어야 해요.”

### 당장 정규직 고용불안 적지만, 일자리 상실은 우려

정규직들은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환 배치의 기회나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발전교육원에서 복합발전과정이나 신재생에너지 과정 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타 회사로의 전직은 어렵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석탄화력은 설비도 복잡하고 메인설비 말고도 부대설비가 많고 정비, 점검 일도 많다. 하지만 풍력, 태양광은 설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

“석탄복합가스화력도 석탄화력에 비해 메인설비 자체가 콤팩트하고 연관설비가 없습니다. LNG는 필터 거쳐서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석탄은 저등급 석탄(Low Coal)을 들여와 미분, 습분 제거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니 더 복잡하죠. 석탄화력은 원자력과 비교해도 압력도 훨씬 높고 지구 상에서 가장 높은 스팀을 다룰 수 있는 기계기술입니다. 기술 수준에서 적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재생에너지 관련 생산, 장비 제조, 기술 업체의 고용은 확대될 수 있지만 대규모 단지로 운영하지 않으면 필요한 인력은 현저히 줄어든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로 인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만 강조하고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2기를 폐쇄하면 같은 용량의 LNG를 짓는다고 해도 석탄 대비 30%의 인력만 필요해요. 정원 반납해야 할 인력만 250명이 넘을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는 10%만 필요해요. 이미 5조 3교대로 자체 인력조정을 시행하는 곳도 있어서 내부 인원 조정 여력이 많지 않아요.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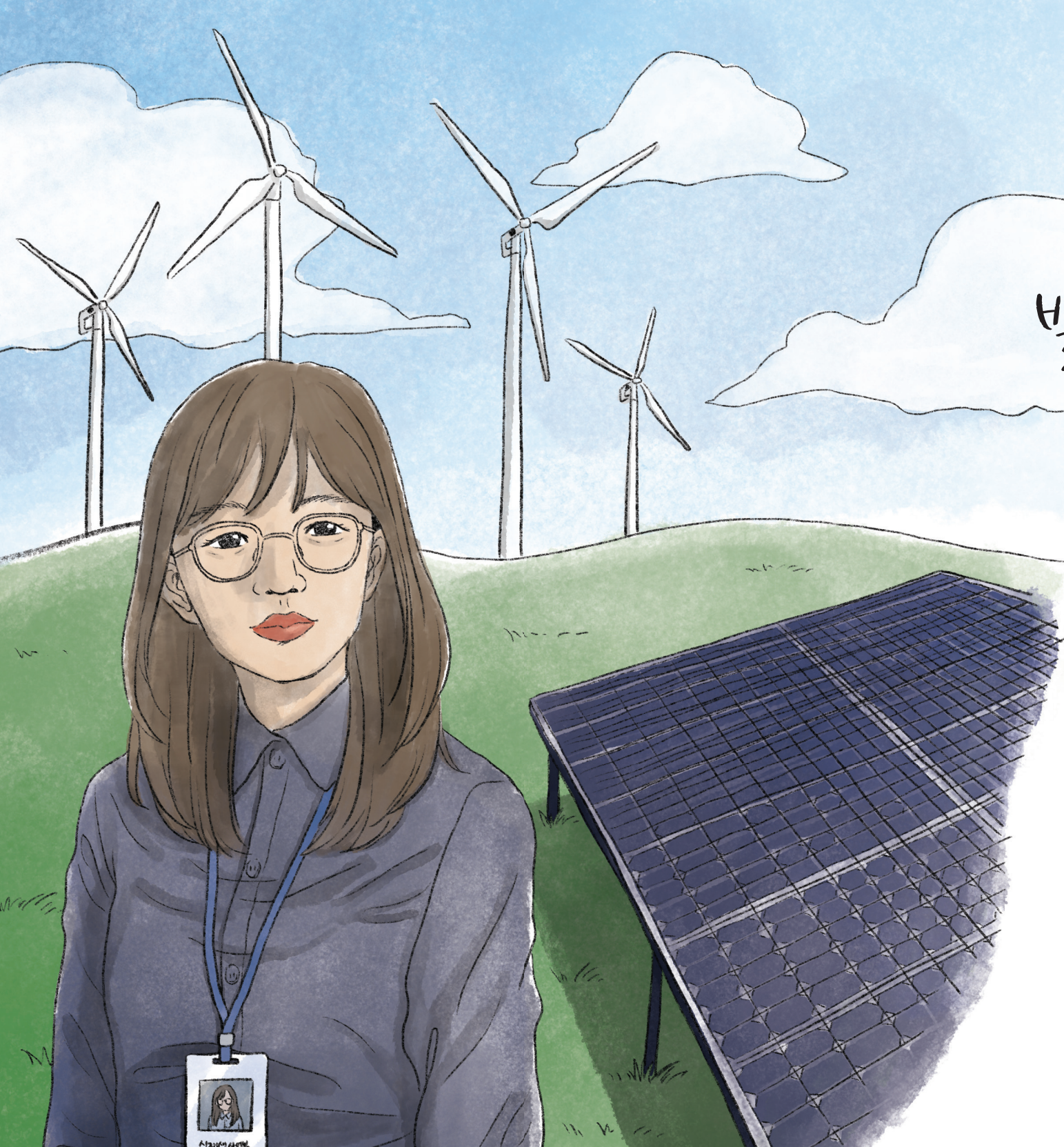
발전사 노조들은 ‘일자리 상실 없는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며 신규채용 중단을 통한 인력 수준 유지, 특별 인건비 승인을 받아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신입사원을 안 뽑을 경우 정부가 발전사 경영평가 시 감점을 주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인력도 기재부가 승인해주겠죠. 우리의 의견을 얼마나 들어줄지 알 수 없어요. 민간과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대단위 풍력발전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실제로 갈 수 있는 수가 매우 적어서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가서 남은 생활 좀 채우는 정도겠죠.”

현재 발전 5사와 한수원 노조는 정부에 에너지 공기업 재통합을 제안하기 위해 회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고용감축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주도하기 위해 발전사들의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환배치 하기에 그 편이 쉬워요. 협력업체까지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공정’에 민감한 젊은 친구들이 부정적입니다.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들거나 자격시험을 쳐서 입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07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담당자

---

나	이	30대 초반
성	별	여성
직	종	전기직, 신재생사업부서
업	력	4년차

---

특	징	도시지역 출신으로 발전소 사택에서 혼자 살고 있음. 여성이라 사무직에 우선 배치되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홍보 등의 업무를 맡음. 직원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높는데 정작 석탄화력 쪽에서는 관심이 낮아 아쉬워함.
---	---	--





#발전사 재생에너지 담당 #30대 #여성

## "기후변화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

태양광, 해상풍력 중심으로 확대 전략...신재생 교육에 관심 필요

정부는 지난해 말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61기 중 30기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0년 현재 전기 실효용량 기준 전원별 비중이 LNG 37.4%, 석탄 31.9%, 원전 21.0%, 신재생 3.3%이던 것을 2034년까지 LNG 47.3%, 석탄 22.7%, 원전 15.5%, 신재생 8.6%으로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폐쇄되는 태안 1~6호기, 당진 1~4호기, 보령 1,2,5,6호기는 LNG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령 3,4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이 추진된다.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0%, 재생에너지 발전량 47.5%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전환 비전'을 선포한 충남도는 지난해 말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2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발전사들도 석탄화력발전소의 LNG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채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부지런히 수립하고 있다. 특히 발전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따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란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 사업자들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적으로 채울 수 없을 경우 외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행돼 해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올라 2021년의 의무비율은 9%이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충남지역 발전 3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발전사는 본부에 신재생사업 전담 부서를 둔다. 30대 초반인 정 씨도 신재생사업 부

서에서 일한다. 부서에는 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해마다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에 대응하는 업무, 출자사업(SPC) 관리, 풍력, 태양광, 수소 전지 등의 개발과 현장 홍보 업무가 있다. 재생에너지 전략 수립과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정 씨는 발전사에서 보기 드문 여성이다.

정 씨는 지방대 전기과를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다니다 재수 끝에 발전전기직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만만치 않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지만 현장 업무에 배치되기는 어려웠다. 발전소 정규직이나 협력업체 직원이나 기계 운전 분야에는 남자가 대부분이어서 남성 중심의 문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미래 산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보람도 느낍니다. 나중에는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여성휴게실 같은 것도 없었다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터를 나와 지역에 살면서 여성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이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알게 되는 사람마다 결혼 여부나 사생활을 묻는 것이 부담스럽다. 정 씨의 업무는 통상업무이기에 교대근무는 없다. 평일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주말이면 도시를 가거나 친구들과 가벼운 여행을 떠난다.

"어디 갈 때 차 안 막히고, 코로나 걱정도 상대적으로 덜한 건 좋은 점이지요. 처음에는 답답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 미세먼지가 아니라 기후변화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 필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문제를 봤을 때 탈석탄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충남지역 발전사들이 석탄화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요. 미세먼지의 핵심문제가 석탄발전인지도 의문이 들어요. 성능개선 한 석탄발전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LNG 수준까지 낮아졌거든요. 기후변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고 국제적으로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원인을 더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씨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엄밀히 말하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석탄가스복합과 같은 신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현재 발전사들의 의무공급량을 충당하는 데는 신에너지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서부발전도 현재 태안의 석탄가스복합화력(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변환시킨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오염물질 배출은 적지만 탈석탄 정책에 맞지 않아, 2020년 말 석탄가스복합화력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를 태워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인 바이오에너지의 경우에도 발전사들이 기존 발전방식과 비슷해 선호했으나 원료인 목재펠릿을 해외서 대부분 수입하고, 발전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더 주력하거나 외부 사업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더 구입해 태양광, 풍력 발전을 더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 씨가 신재생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대외여건과 정책방향, 에너지 자원의 다양성, 사업 추진의 경제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다. 발전사들의 에너지원별 개발계획을 보면 중부발전의 경우 육상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소수력 순이고 서부발전의 경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순이다. 대개 태양광과 풍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기술개발이 중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보통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신재생에너지에서 바이오에너지나 폐기물의 비중은 축소할 계획입니다.”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는 화석에너지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로 발전하려면 기술개발이 더 필요하다. 서부발전의 경우 석탄가스복합화력이 신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욱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며, 태안 안면 클린에너지 245MW 육·수상 태양광, 남면 염해농지 99MW 육상태양광 등 대대적인 태양광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해상풍력을 신재생의 주력으로 계획하고 있고 동서발전과 중부발전도 마찬가지다. 육상풍력은 규모화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부발전은 보령시와 협력해 오천면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세우고,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재생에너지의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추진 중이며 2019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풍력발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풍력정비학교 아카데미를 열어 두산중공업이나 유니스 등의 업체를 방문했다. 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해 10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만 60조를 투자해야 하기에 공동투자자를 찾아야 한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협력하는 것도 신재생에너지부서의 일이다.

### 신재생에너지 교육으로 석탄화력 인력 활용

신재생에너지 전략 수립을 할 때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따른 발전사 고용문제 대응, 발전소 인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포함된다.

보령화력발전소의 경우 2022년 5월 폐쇄 예정이던 보령 1,2호기를 지난해 말에 앞당겨 폐쇄했다. 발전사 정규직은 135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정원을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공동설비 인력 및 폐지 업무 인력을 남겨 두고, 신규 사업 부분에 95명 배치, 5조 3교대 업무, 신서천화력발전소 등으로 전환배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발전사 내 고용감소는 거의 없었다. 경비 청소를 담당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도 경비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청소를 담당하던 9명의 인력은 은퇴 예정자들이 있어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발전사의 입장이다. 정 씨가 일하는 발전사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을 진행한다.

“풍력사업이 확대될 때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석탄화력발전소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교육이나 워크숍을 열면 에너지 전환에 대해 전 직원들의 관심이 높은 게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직원들의 관심은 덜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무비 착복 금지

 1부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08  
노동조합 활동가



---

나	이	40대 후반
성	별	남성
직	종	협력업체 노조 활동가
업	력	20년차

---

특	징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출신으로 1990년대 말 지역가점 공채로 입사함. 석탄취급설비부터 환경설비까지 협력업체가 맡는 전체 공정에 투입된 경험이 있음. 경쟁입찰 도입으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김용균 사망사건 발생 이후로 노조 활동에 전념함.
---	---	---





#노동조합 활동가 #40대 #남성

## "절벽에 내몰린 노동자...대책 함께 고민해주길"

5조 3교대는 임시조치, 사회적 대화 통해 대안 찾아야

1990년대만 해도 박 씨가 입사한 석탄화력발전소는 괜찮은 직장이었다. 공기업 정규 직은 아니지만 화력발전소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번듯한 일터였다. 그때는 ‘화력발전소’라고만 했지, 앞에 ‘석탄’이라는 단어를 붙여 부르지도 않았다. 지금처럼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꼬리표도 없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일은 국민들의 일상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다. 입사할 때만 해도 그런 자긍심이 있었다.

하지만 일은 고되고 작업환경은 열악했다. 원청인 발전사가 담당하는 발전기와 터빈, 보일러 시설 외에 대부분의 굵은일은 김 씨와 같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몫이다. 발전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협력업체는 석탄을 하역해서 저탄장에서 보일러로 공급하고, 보일러에서 연소되고 남는 석탄재를 처리하거나 집진기, 탈황설비 등을 담당한다. 박 씨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발전소 외형만 보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70~80년대 탄광 같았다”고 말했다.

힘들었지만 당시에 고용불안은 없었다. 2000년대 들어 민영화가 진행되고 경쟁입찰이 도입되면서 일자리는 불안해졌다. 소속된 협력업체가 입찰에 실패하면 오랫동안 일했던 일터를 떠나 다른 지역 발전소로 옮기거나 일자리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 박 씨는 이때부터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발전소에 입사할 때는 평생 다닐 줄 알았죠. 영동화력에서 처음 경쟁입찰이 도입됐을 때 오랫동안 맡았던 협력업체가 떨어지면서 노동자 100명이 공중분해됐어요. 영동화력이 있던 강릉에서 하동, 삼천포, 당진, 태안으로 노동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강릉에서 일하고 살았던 가정이 한순간에 박살난 겁니다. 제가 다니는 발전소에서도 입찰

이 나왔는데, 우리 회사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2018년도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20대 협력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박 씨는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조활동에 전념하게 됐다.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안전한 일터를 위해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단계적 폐쇄에 원칙적 동의...완충지대 마련해야”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사용자인 기업, 발전사와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입장차는 존재한다. 두 노조 모두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이 세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큰 줄기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점차 폐쇄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완충지대와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죠. 특히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재생에너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설비와 공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인력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간 단계로 LNG를 새로 짓는다고 하지만, 같은 규모의 화력발전소에 비해 30%의 인원만 필요하다. 완충지대가 없다면 70%의 노동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주로 투입되는 연료환경설비 분야는 LNG 전환이 이뤄지면 해당 업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 현재 연료환경설비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과 5조 3교대 도입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계약 해지하고 구조조정되고 말겠지만, 공



공기관이 되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수 있겠죠. 공공기관화는 최소한의 보루로 필요하지만 이것 역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됩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야간근무를 없애고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5조 3교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4개조로 운영하는 것을 5개조로 늘이면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있지만, 임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또한 5조 3교대로 변경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전체 임금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다.

“5조 3교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임금이 줄어요. 이 부분은 업체의 노무비 착복을 해결하면 일정 부분 보완이 됩니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 20년 가까이 임금이 거의 안 올라서, 현 상태에서 5조 3교대 시행은 내부적 반발이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을 위해서 5조 3교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어요. 옆에 있는 동료를 내 몰 수는 없죠. 해고자는 자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임금이 저하되더라도 폐쇄가 코앞에 닥친 상황이라 5조 3교대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거죠.”

#### “노동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 필요…정부가 나서야”

박 씨는 운전분야 하청노동자가 보내온 글을 소개했다. 이 하청노동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실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청도 하청 업체도 대책이 없다며 정부가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발전 공기업 등 원청 직원의 경우에는 LNG발전소 건설 및 운영인력으로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하청 용역노동자의 경우에는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사실상 회사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원청에서 하청, 용역회사 노동자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정부가 예산을 승인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자체 또한 예산이 없고 지역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찬 상태예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위협을 받게 됐다. 다행히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정부는 누구도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1년 3월 21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도 지역사회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 씨에게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입장을 묻자,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하청노동자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조사용역’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고용보장과 에너지 전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원전공론화 위원회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사회보장법 등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개방된 영역에 대한 재공영화를 통해 국가가 다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피해받는 노동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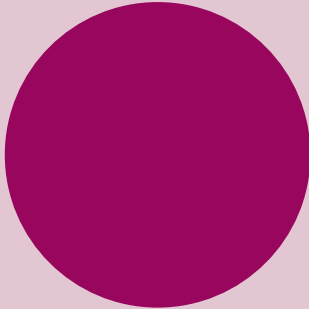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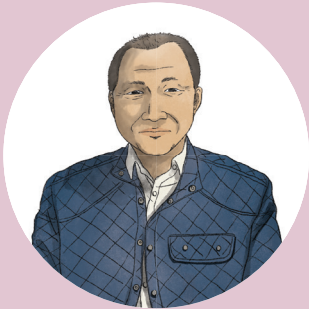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자꾸 숨겨져요. 잠재적 범죄자가 된 기분이라고 할까요? 화력발전소 노동자 대부분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를 위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힘든 환경 속에서 일해 온 노동자이고, 이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해온 사람입니다. 대책을 함께 고민해주시고,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화력발전소 폐쇄를 반대하지 않아요. 지구를 살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동의하지만 대책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해체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여러분의 친구이자 가족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2

###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 09\_발전소 인근 어민
- 10\_개발위원회 임원
- 11\_환경단체 활동가
- 12\_시민단체 활동가
- 13\_지방의회 의원
- 14\_기초지자체 공무원
- 15\_지역신문 기자
- 16\_청소년



09

# 발전소 인근 어민

나 이 70대 후반  
성 별 남성  
직 종 어부

특 징 선조 때부터 살던 지역 토박이. 부인과 함께 살고 있음.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서 살고  
있음. 1990년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 시설이 들어선  
이후 어획량이 줄어 피해를 입음.





#발전소 인근 어민 #70대 #남성

## "발전소 때문에 터전 잃고 마을은 분열됐어요"

황금어장은 사라지고 주민은 건강악화, 지원금도 무용지물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이 마을은 200가구, 4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바다로 길게 뻗은 마을 앞으로 작은 섬이 모여 있고, 산자락 위에서 바라보이는 탁 트인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특히 해질녘이면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이 출렁이는 바다와 만나 감탄을 자아냈다. 도시근교에 위치해 관광객들이 종종 찾는 곳이기도 했다. 바다에는 다양한 어종들이 많아서 낚시객도 많이 찾아왔다. 이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어 예로부터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신 씨는 선조 때부터 살던 이 마을에서 자신도 나고 자랐다. ‘물 반, 고기 반’이었던 시절에는 바다에만 나가면 그물망에 꽃게, 주꾸미, 광어가 줄줄이 매달렸다. 바다에 나가 지 못하더라도 누구든 호미 하나만 들고 집 앞 갯벌로 나가면 굴을 캐서 몇 만 원씩은 벌 수 있었다. 바다는 신 씨나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오랜 고향이었다.

### 황금어장이 사라졌다

1990년대부터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 시설이 이 지역에 들어선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 씨와 주민들은 바다가 생계의 터전이라 조바심이 났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해양 생태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민들은 알고 있었다.

“석탄을 실은 배가 얹은 바다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흙탕물을 일으키는데 그때 물고기 아가미에 흙이 들어가서 폐사하는 거죠.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거야. 저도 할아버지도 이 바다를 밥줄 삼아 살았는데, 눈앞이 캄캄했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발전소 건설을 반대했어요. 목소리만 크게 내면 되는 줄 알았지. 그때그때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

야 하는데, 그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잘 몰랐던 거죠. 결국 밀어붙이기 식으로 발전소가 들어왔어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는 것은 생태계 교란의 주요 원인이다. 어민들에게는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요소이다. 화력발전소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로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때 7~9℃ 가량 데워진 물을 바다에 내보낸다. 이때 흘러나온 온배수로 인해 신 씨의 어업도 많은 피해를 받았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 씨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물망에 걸려들던 물고기 수가 눈에 띄게 줄은 거예요. 어종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민들은 알았지. 발전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더니, 단기간의 보상만 약속했어요. 피해보상도 어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다르고, 형평성도 맞지 않아 오히려 어민들끼리 분열만 커졌어요.”

집 앞 갯벌과 양식장에서 생산하던 굴은 발전소 건설 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르자,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덩굴었다. 굴이 폐사한 것이다. 신 씨의 부인도 굴을 캐서 아이들 키우는 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 다른 마을의 굴은 풍년이라고 하던데, 여기만 이렇게 폐사되는 모습을 지켜보니 분통이 터졌다. 발전소에 항의를 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발전소가 들어오자 생각지도 못한 피해는 계속되었다. 석탄을 실은 대형 차량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았다. 또한 대형 차량의 분진 피해가 심했다. 빨래를 집 밖에 널어 놓으면 새까만 석탄 분진이 내려앉아 다시 빨래를 해야 했다. 신 씨의 부인은 굴을 캐지 못하자 밭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

“바람 불면 발전소에서 날아든 새까만 분진이 배추밭에 다 날아와. 배추가 자라면서 하얀 이파리 사이에 석탄재가 내려앉는 거지. 배추가 거뭇하니, 이걸 누구한테 팔아요? 못 팔죠. 농사도 못 짓고, 가슴도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 굴뚝의 수증기만 보아도 가슴이 ‘철렁’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환에 대해 호소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야 주민건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6년도 충남도가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 조사를 벌인 결과, 취약 지역의 주민 체내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중금속이 쌓여 있



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같은 심리적 피해도 나타났다.

신 씨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몇 년 전부터 암 환자가 부쩍 늘었다. 한 마을에 암 환자가 계속 생기다 보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암 발생 원인이 발전소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평소에 마누라는 건강했어요. 잔병치레도 별로 하지 않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2016년도에 폐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날벼락이 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수술을 해서 힘든 일은 하지 못해요. 마을 자체적으로 알아보니 지금까지 23명의 암 환자가 생겼고, 13명이 죽은 거야. 의사는 암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발전소와 송전탑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운반하기 위해 거미줄처럼 뻗어 나온 초고압 송전선은 일상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신 씨와 부인이 경작하는 밭 너머로 거대한 송전탑의 행렬이 시야를 압도한다.

“날이 흐리면 송전탑이 ‘앵~앵~’ 거려. 그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안개가 끼는 날이면 그 소리가 더 기괴하게 들리는 거야. 가끔 환청처럼 귓가에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환장하는 거지. 저기 보이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만 봐도 가슴이 철렁해요~”

주민들에 대한 건강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발전소는 마을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 연 30만 원 진료카드를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병들어가는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발전소 때문에 명절에 사촌 얼굴도 못 봐요”

발전소는 직원 채용 시 지역 출신에게는 10점의 가산점을 주어서 지역 출신의 직원을 뽑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산점을 준다 해도 경쟁에서 뽑힐 확률은 1%도 되지 않는다. 100명의 직원을 뽑는다면 1명 정도 될까. 신 씨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다.

“마을에서는 혹시나 일자리라도 생기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죠. 근데 전문기술이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가산점을 준다고 했지만 도시 사람들하고 이미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아는 거지. 이웃의 60대 아주머니 2명이 청소 일자리를 얻어

서 출퇴근을 하긴 해요.”

발전소 인근 5km 이내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성사업 등등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해 일정 금액(kWh 당 0.18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나오는데 발전소로부터 5km 내에만 쓰이게 되며 용도는 복지회관 건립, 소득사업과 관련된 창고 등의 시설물, 안길 확장 포장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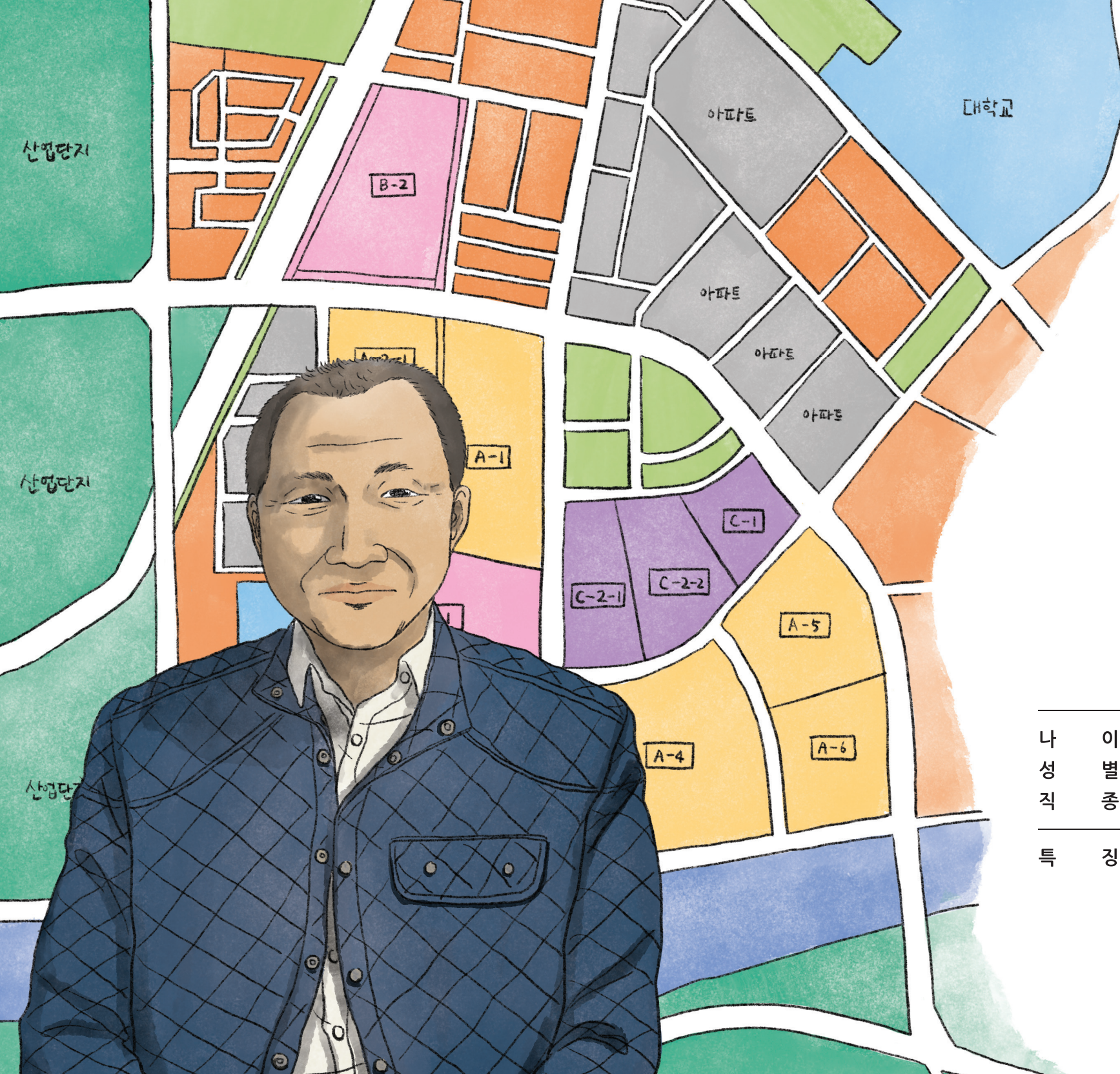
이를 놓고 마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개발위원회나 변영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 유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발전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바란다.

신 씨가 살고 있는 마을은 예로부터 혈연으로 뭉어져 대부분 친인척 관계인 집성촌이다. 신 씨도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사촌과 입장 차이가 있어 마을에서 얼굴을 붉혀야 했다.

“지원금은 개별 주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을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죠. 정부에서는 보조금으로 공동사업해서 이익을 만들라고 하는데 시골에서 이익창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난해 특별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올해 반납했어요. 이 동네는 대부분 친인척이야. 발전소 때문에 명절에도 사촌 얼굴은 못 봐요. 결국 마을 주민들만 갈라놓았어요.”



# 개발위원회 임원



나 이 60대 후반  
성 별 남성  
직 종 개발위원회 위원장

특 징 마을 이장을 10년 동안 역임하고, 다양한 봉사단체에도  
참여해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가  
졌음. 개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나가 선출되었음.





#개발위원회 임원 #60대 #남성

## "지역 경제 고려...발전소 폐쇄만이 능사 아니야"

주민 건강 피해 있지만, 지역경제 뒷받침할 대안 없어

면 단위에 설립된 A개발위원회는 지역사회리더가 모여서 현안을 협의하고,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번영회 성격의 모임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오고 각종 지원금과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했다.

개발위원회 구성원은 주로 이전 번영회에서 활동 하신 분들이다. 마을 이장과 마을 총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지역봉사단체, 의용소방대, 농업사회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주민들의 협의기구이다.

송 씨는 2020년 A개발위원회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마을에서 10년 동안 이장을 맡아 활동해온 송 씨는 지역의 다양한 봉사단체에서도 활동했다. 지역의 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을 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단위가 아닌, 좀 더 큰 지역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마을 이장이었을 때 개발위원회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때는 마을의 대표로서 마을의 이익에 중심을 두고 의견 개진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다보니 마을의 입장만 고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지역이라는 큰 틀에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각 마을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개발위원회 위원장 선거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막상 위원장으로 활동해보니 여러 말을 듣게 돼요. 개발위원회가 발전소에 줄 대서 사업 한다고 뒤에서 수군 대죠. 그래도 주민들 대다수는 지역을 위한 사업과 공을 인정

하는 편이에요. 개발위원회 활동은 사실 봉사거든요. 이런 걸 잘 모르고 그저 배 아파서 하는 말들이 가끔 힘 빠지게 만들기도 해요.”

## 화력발전소, 폐쇄보다 성능개선으로 환경 피해 막아야

송 씨는 과거를 회상하며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올 때 잘 몰랐다면 아쉬워했다. 1997년에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왔다. 전주 하나 들어와서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시대였다.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은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지자체만 알았다. 그때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1,2호기 건설 당시에는 4호기까지만 건설한다고 했다. 건설과정에서 철탑을 세울 때도 철탑인가보다 했다. 그런데 또 철탑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다. 송 씨를 포함해 지역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송전선로 철탑을 반대하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4호기까지는 그래도 참았어요. 그런데 5,6호기를 추가 증설한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년 후에 7,8호기를 추가 증설한다니까 그제야 지역 주민들이 ‘이게 뭐지?’하고, 미세먼지와 지역 환경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석탄가루가 저탄장에서 날아오고,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불면 까만 분진이 집 창문에 날아들고 빨래에 묻고 상추, 배추에 내려앉았어요. 키우고 있던 돼지, 소에 질병이 생기고, 주민들 중에 암 환자도 많이 생겼어요.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이 병들이 발전소 때문이란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발전소 측은 받아들이지 않죠.”

송 씨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걱정되지만, 한편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려할 때 ‘발전소 폐쇄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환경단체의 주장만 듣고, 조기폐쇄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적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발전소 폐쇄 안 돼’라고는 말 못하는 상황이다. 대기환경, 미세먼지는 지역에서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민감하다. 이에 송 씨는 환경문제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업을 하거나 일자리 있는 분들은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그나마 농사 지으면서 일 좀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저에게 물어요. 저희 지



역은 발전소와 연관된 사업체들이 많아요. 슬러시 재활용 업체, 석탄재를 활용하는 시멘트 업체 등이 발전소 문 닫으면 도산되거나 이주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체들 일자리가 일시에 사라지면서 문제가 돼요. 연착륙 방안을 만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미세먼지를 너무 뿜어내는 설비라면 과감한 설비 개선이 필요하지만, 폐쇄는 경제적으로 계산할 때 맞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시설보완을 해가면서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폐쇄하자는 겁니다.”

발전소 폐쇄로 지역이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발전소 주변은 임대업, 식당업, 납품업, 시멘트공장과 정규직원 사택이 있고, 발전소와 관련 업체에 취업해서 일하는 지역 주민들도 꽤 많다. 향운노조, 운반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개인사업자들도 있다. 이들은 발전소 폐쇄가 되면 사업체가 도산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의사결정으로 대안 찾는다

A개발위원회가 속해있는 지역은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송 씨는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생긴다며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태양광, 풍력 발전 업체도 들어오려고 해요. 마을과 협의해서 풍력발전을 세운다고 해도 옆 마을은 싫어해요. 피해는 똑같은데 실질적 이익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주민 간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도 만들었어요. 대규모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사업을 할 때 전체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판단하고, 지역 주민 이익을 관장하고 중재하는 거죠. 2019년에 설립했고, 개발위원장, 이장단협의회장, 부녀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노인회회장 6인 대표체제이며 이장을 통해서 각 마을별 동의를 파악해요.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의사소통 방식인거죠. 이렇게 협의를 통해 풍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송 씨는 이처럼 지역 주민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발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개발위원회 조직의 한 해 예산은 대략 25억 원 정도이다. 인구가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면 단위 개발위원회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A개발위원회 주요 지출 항목은 사무국장 및 직원 급여를 비롯한 사무실 운영, 위원장

활동비, 설·추석 선물비, 행사협찬 및 화환 비용, 지역 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여기에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6·25 참전용사 위로, 노인정 난방비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개발위원회 단합대회, 워크숍, 신년교례회 및 임원 이취임식, 면민 음악축제, 면민 체육대회, 마을별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올해에는 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도 신규 사업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비, 백신비, 긴급재난기금이 추가되었다.

A개발위원회의 예산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임원들의 개인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전문가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개발에 따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회의내용을 공개해 의사결정에 소외되지 않게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행정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 환경단체 활동가



나 이 40대 후반  
성 별 남성  
직 종 지역환경단체 사무국장

특 징 지역 출신으로 환경단체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함.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함. 2010년부터 석탄화력의 대형화 저지 등을 시작으로 지역의 탈석탄 운동을 이끌어 옴. 최근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고 있음.





#환경단체 활동가 #40대 #남성

## "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석탄화력 폐쇄해야"

에너지 전환, 지역 거버넌스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

지구의 온도는 최근 100년간 급격하게 올랐다. 자연적인 변화보다 25배 빠른 속도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설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5억9800만 톤에서, 2018년 7억2800만 톤으로 10년간 대폭 증가했다.

충남 지역에서 환경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씨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석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 중 절반 가량이 충남에 위치해 있다. 한 씨는 지역에서 환경단체 활동을 하면서 '석탄화력 대형화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충남 석탄화력 피해대책과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토론회' 등을 통해 탈석탄 이슈를 꾸준히 부각해왔다. 이외에도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역민들의 환경적, 건강적 피해를 알리고 환경과 지역민이 상생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환경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2016년 그린피스가 미국 하버드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연간 1,100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NASA(미항공우주국)가 한국의 공기질을 조사한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미세먼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상공에서 바라본 하늘은 맑았지만 뚜렷한 먼지 띠가 도심을 뒤덮고 있었다. 미세먼지와 함께 석탄화력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에너지 전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되자 석탄화력발전소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 씨는 충남의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1년 석탄화력발전이 만들어낸 미세먼지는 전체 배출량의 3.4%이며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질산화물, 이산화황도 2차 미세먼지를 만든다.

"석탄화력발전 중에서도 특히 노후 석탄화력발전은 설비 비중의 10.6%에 지나지 않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1%를 차지해요. 봄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가동 중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예요."

석탄화력의 수명은 30년이다. 한 씨는 '2030년 석탄화력 폐쇄, 2050년 탄소제로'가 목표라며 기후변화 위기 대응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발맞추어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엔기후변화 국가협약체(IPCC)는 향후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2010년 기준 45% 수준으로 감축하지 않는다면 기후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씨는 노후화된 석탄화력 폐쇄는 당연한 과제이지만,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들의 환경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다음에 탈석탄, 탈탄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전환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석탄화력 폐쇄로 인해 노동자, 상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좋은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이어도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 위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한 씨는 거대한 담론인 기후변화 위기 대응보다도 지역에서의 소통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정부를 주축으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입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서 소통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진행된 방식을 보면 대강 얼개를 만들어놓고 논의하자고 해요. 여전히 행정이 큰 틀을 짜 놓으면 내용을 듣고, 조언만 건네는 식입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같이



논의하고 보완해야 해요.”

석탄발전소를 폐쇄한 부지에 대안으로 LNG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한 씨는 고민이 더 필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LNG도 어차피 기름을 쓰고, 단지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공해유발을 좀 덜 할 뿐, 재생에너지는 아니다.

에너지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미래지향적 운동이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기회가 될 수 있다. 화석연료, 대규모 집중형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소규모 분산형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수상 태양광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소문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져 그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 씨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해서 진실을 알리고,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능동적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는 에너지에 대한 생각부터 다시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대형공장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전기절약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돼요. 에너지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대형 토건 사업으로 에너지전환을 이루면 또 지역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피해 문제를 반복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개별 태양광 설치 지원처럼 자생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수도권 전기공급기지로 주민 고통받는 상황 탈피해야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에 많이 건설된 이유는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이다. 수도권 내 도시와 공장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비교적 가까운 충남을 전력기지로 만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피해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아왔다. 도시와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한 씨의 얼굴이 어둡다.

“전기를 도시에 공급하기 위해 농촌에는 높이 치솟은 송전탑이 세워졌어요.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에서 흐르는 보이지 않는 전자파와 흐린 날씨에 유독 귀를 거슬리게 하는 굉음으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으로 피로함을 호소해요. 송전선로와 미세먼지의 원인은 석탄화력이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산업자본에 값싸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

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산업자본에 특혜를 주기 위해 농촌 지역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지역의 주민들은 석탄화력으로 인한 재산 피해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석탄화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발생의 증가로 주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2016년 3월 충남도와 단국대가 실시한 건강조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150명의 혈중 카드뮴 평균 농도가 다른 지역 주민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도 시지역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농촌은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희생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인 거죠.”

한 씨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단순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피해는 환경과 건강 외에도 경제적 손실은 비용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석탄분진, 송전탑, 소음, 온배수, 빛공해, 대형트럭 등으로 오랜 시간 심리적인 피해를 입는다.

“송전탑의 굉음 때문에 불면증으로 7년을 고생한 분도 있고, 송전탑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쉰다는 분도 있어요.”

더 억울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피해는 보상도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평생 농사일이나 어업에 종사한 주민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것은 단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몇 % 줄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편리함과 경제적이란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요?”



# 시민단체 활동가



나 이 50대 초반  
성 별 남성  
직 종 시민단체 정책위원장

특 징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과 행정 간의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상함. 또한 지역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 마련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함.





#시민단체 활동가 #50대 #남성

## "시민 참여 없이 근본적인 해결 불가능"

탈석탄 대체 산업에 대한 주민 불신 높아

지역에 발전소 외에는 눈에 띄는 큰 기업이 없다. 대형 공장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작은 농촌형 공단들이 전부이다.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 지역의 시민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서 씨는 “큰 틀에서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에 동의하지만, 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경제가 쇠퇴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2개의 발전기가 폐쇄될 경우 100여 명의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족을 포함해 300~400명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수입, 소비지출도 각각 연간 40여 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겨우 버텨오던 인구 10만의 마지노선도 붕괴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10여년 동안 8개의 발전기가 가동을 멈추게 되면 이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서 씨는 과거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구 15만 도시가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부 주도 정책으로 지역이 붕괴되는 모습은 가슴 아팠지만 서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이 좌지우지되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며 “시민의 참여를 통해 우리 지역을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싶어서 시민단체 활동가가 됐다”고 말했다. 15년 간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서 씨는 최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행정 간의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큼니다. 이전에도 정부에서 석탄산업을 폐지하기 위해 지원금도 배부하고, 지역경제 위기를 막는다며 관광산업도 실행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관광이라는 게 외부 손님들이 여기로 찾아와야 하잖아요. 교통편도 불편하고 관광인프라도 부족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사업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관광산업에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인재가 충분치 않으니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 주요 의사결정에 배제된 주민들 ‘무력감’만 팽배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정부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서 씨는 지적했다. 정부에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서 씨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라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삶이 우선시되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 조건이다. 이를 위해 서 씨는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원래 성능 개선을 해서 202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충남에서 조기 폐쇄를 주장하면서 다시 2020년까지 폐쇄 시점이 앞당겨졌어요. 이 모든 결정에서 시민은 논의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요.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는 어떤 지역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탄소경제’ 위주의 도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석탄화력은 기후위기 대응에 수반되는 ‘좌초 위기산업’으로 분류된다. 에너지 전환은 산업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역균형 뉴딜 충청포럼’에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 유일하게 서 씨가 시민단체 활동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지역에 지역균형 뉴딜정책이 집중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전소는 석탄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재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지방 정부는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숨어있는 인구 찾기’ 시책을 펼치고 친환경 자동차 튜닝 산업,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사업,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지역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LNG 발전소나 태양광, 풍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일자리, 인구, 세수 등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서 씨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표면적인 것만 바꾸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종합에너지특구를 진행하며 태양광, 풍력이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책상 위의 이야기라고 서 씨는 비판했다. 에너지 정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풍력으로 소가 불임이 되고 시끄러워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가끔 저장장치도 터지고 산림도 훼손돼요. 과연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질문해야 해요. 그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고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기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서 씨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에너지 전환이 발전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석탄발전소를 폐쇄한 부지에 박물관, 체험관, 예술관으로 재탄생시켜 지역의 다양한 산업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LNG 발전소 건설은 지방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일”이며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다양한 방식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적 대화 대표성 고려하고, 분야별로 세분화 필요

더 이상 지역의 과제를 정부에만 맡길 수는 없다. 서 씨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소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 시민과 산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우선되

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 및 산업 전환의 모델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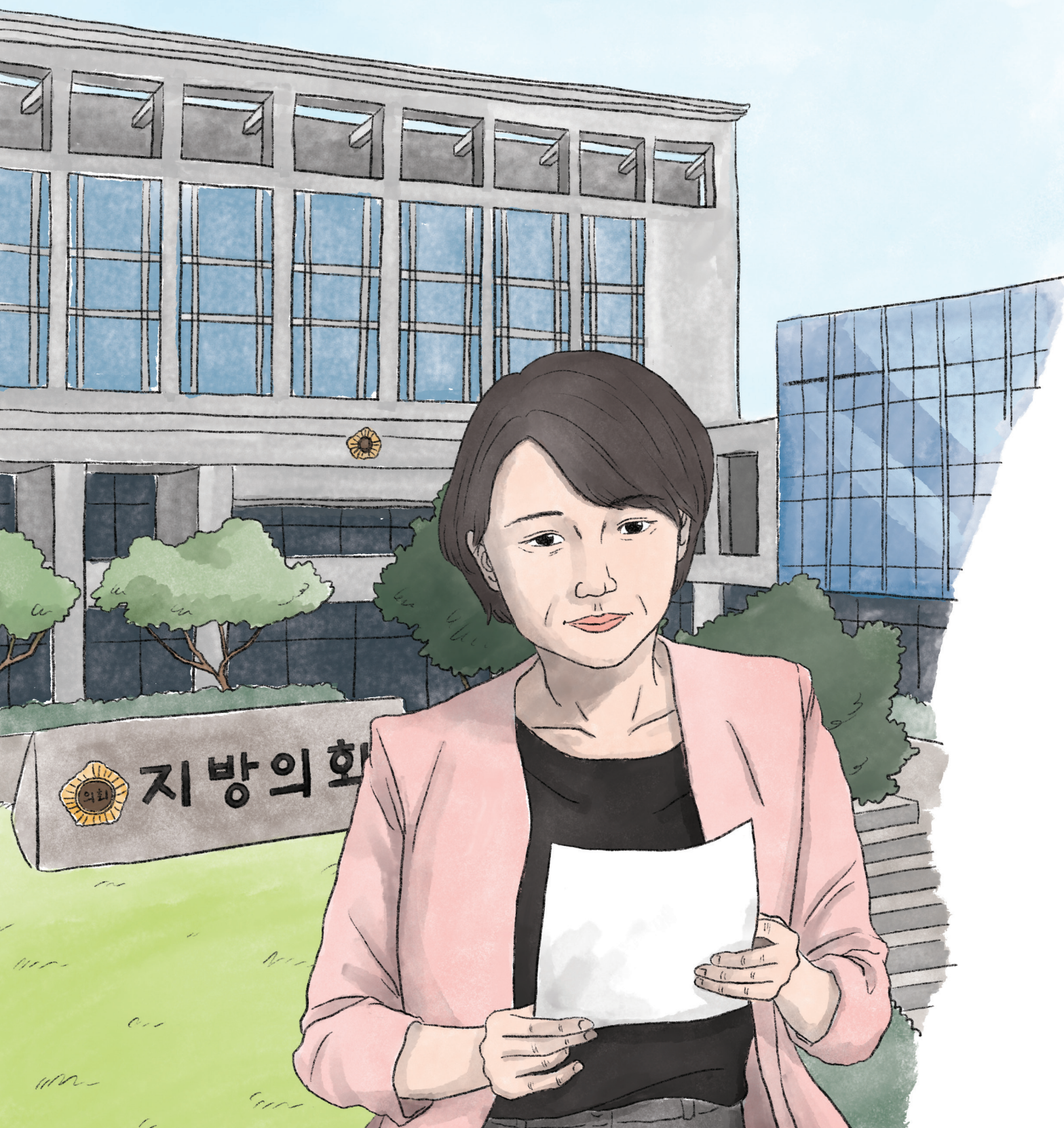
서 씨가 활동하는 단체는 시민들이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정책포럼을 발족했다. 한 달에 한번 개최되는 포럼은 두 개의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진행하며,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개인과 활동가, 기업인, 학계, 교수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전에는 중앙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지역에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있어 서 씨는 지역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불안 쟁점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할 경우, 여러 갈래로 나뉜 노조들의 목소리 중에서 누가 대표성을 가질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 내에 기획 및 추진 단위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 관심분야가 다른 만큼, 사회적 대화 대상을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한다.

“지역에서 이야기해보면 자기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고용문제 외에 나머지 문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사안인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모두 다른 거예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때는 논의의 영역에 따라 그룹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역의 대안산업을 이야기하는 단위들이 있고, 석탄발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용문제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의회 의원

---

나	이	50대 초반
성	별	여성
직	종	기초지자체 의원

---

특	징	동창, 사회단체 활동 등을 통해 네트워크가 활발하고 지역 여론을 잘 알고 있음. 탈석탄에 찬성하나 지역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큼. 지자체와 발전사가 나셔서 논의의 틀을 만들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 지역을 세심히 배려하지 않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도 있음.
---	---	--





#지방의회의원 #50대 #여성

## "탈석탄 대책수립, 민간이 참여 못해 안타까워"

지자체와 발전사가 지역사회와 논의하는 구조 만들어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환경적 이슈지만 지역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주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다. 지역 정치인들은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초지자체 의회 최 의원도 마찬가지다.

“예전엔 나도 석탄화력에 반대했죠. 거주 환경에도 좋지 않고. 그런데 의원이라는 위치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시민들의 생존, 삶을 내팽개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득 보는 사람, 일방적 피해를 보는 사람 등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50대인 최 의원은 지역 출신으로 외지에서 대학을 다니다 졸업하고 지역으로 돌아와 사업을 했다. 기업인, 동창회 모임 등에 꾸준히 나가며 청년회 등 봉사활동도 하다 보니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졌고 출마 권유를 받아 군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재선 했다.

“개인적으로는 탈석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생태적인 부분에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먹고사는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역 경제 시스템이 석탄화력발전엔 맞추어져 있어요. 발전소가 대단위로 건립되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직원과 자영업 식당, 임대업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생태계가 해당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모든 산업이 어려워집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를 시군마다 1,000~3,000명까지 예상한다. 여타 이렇다 할 산업이나 대기업이 없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보령과 태안의 경우 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발전사 직원들이 여기서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술이나 밥은 먹으니까요. 인구가 안

그래도 줄고 있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 걱정들이 많아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앞당겨지면서 의회에서 에너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꾸리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변화에 대한 대안을 미리 줘야죠. 장기적으로 지리적 여건이나 위치를 고려해 생태도시로 간다든지,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한다든지 한 번에는 못 가도 연차적으로 가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지역 주민들도 동의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 국가산업인 전기를 생산한다는 미명 아래 여러 재산적 환경적 피해를 주고 이제 정책이 바뀌었으니 또 피해를 보라는 시그널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없어

보령의 경우 지난해 말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화력발전소 보령 6호기를 대체할 550MW급 LNG발전소를 함안에 짓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의회정책협의회에서 보령화력 5,6호기 대체건설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중부발전 측은 신규 LNG발전소 건설사업 유치와 바이오연료 전환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과 발전사는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투명한 정보공개, 상호협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행정이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폐쇄 부지에 석탄화력박물관 건립을 제안하고,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해 피해지역의 고용·경제 위기 지원을 받거나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도 냈다.

“사실 의회에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할 주제거든요. 설불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의견을 모으기도 어려워서 산발적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 셈이지요.”

최 의원은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와 공유 없이 행정기관과 발전사가 서로 생존을 위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



하는 모양새예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지역사회와 공유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런 논의를 민간 쪽에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만 모으고 설명회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시민사회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발전사가 지역사회와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단체나 전문가 그룹, 학계와 논의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시민들이 건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가 없어요. 워크숍 등을 통해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할 때는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자영업자들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시민단체들만으로는 지역 여론을 주도하지 못해요. 옷가게, 음식점, 술집, 호프집, 보육단체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구감소로 느끼는 부분은 비슷할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사회적 대화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 대체 산업 주민 이해 과정 필요...일자리 대책 시급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LNG발전소 신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나 수소생태계 구축 사업 같은 것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LNG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대답해야 한다면 저는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발전사와 행정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문제지요. 재생에너지도 유치되고 나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방법이 문제예요. 먼저 알리고 반대하는 분들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줄일 것이고 백년대계를 위해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출발해야죠.”

수소의 생산과 저장, 유통, 활용까지 시스템을 만드는 수소생태계 구축은 아직 현실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 산업으로 지정하고 시범단지로 지원하려면 충남 차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협상력이 필요하다.

“위치와 공간을 갖추고 당진, 태안, 보령 세 지역이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침체될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태안군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쓰지 못해 2019년에는 30억 원을 장기미집행으로 반납하기도 했다.

“산업구조를 재편하려면 촘촘한 계획이 있어야지, 탈석탄이 선언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금전적 지원도 하고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지원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별 지원을 할 수 없으니 공동 수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주민참여사업은 주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가지 않으면 힘들죠.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장기계획 자체를 부정합니다. 재단이 정말 필요하다면 설명회, 토론회를 많이 열고 설득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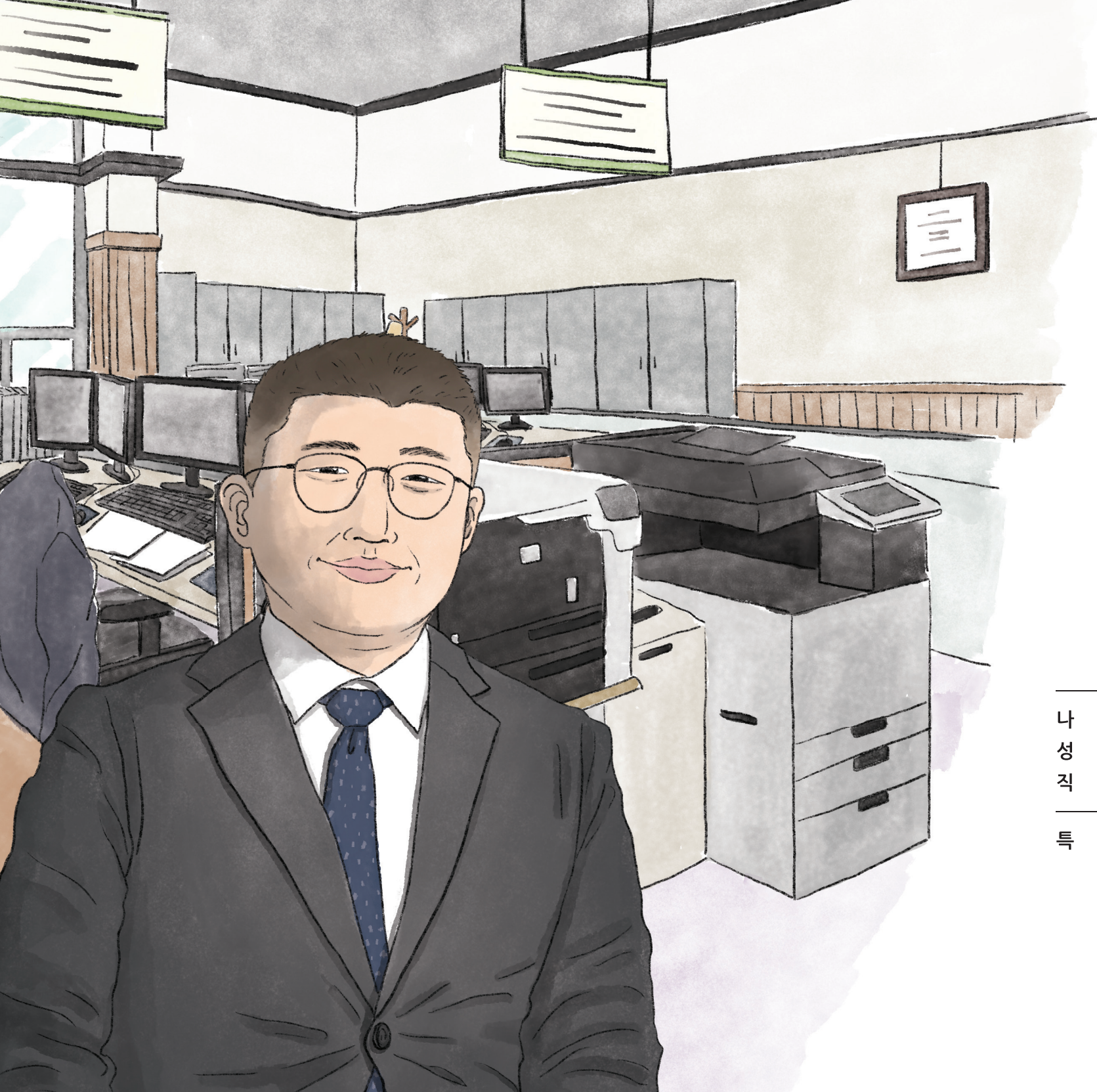
최 의원은 무엇보다도 탈석탄 정책에 따라 고용불안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재취업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계 차원에서 이 일을 해 온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2년 정도는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이걸 정부 정책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만 들어지면 자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지역이 안정화되지 않겠어요?”

비단 재생에너지나 관련 분야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마다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 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마을 간 사제도처럼 공공영역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 크리에이터나 농수산물 브랜딩 같은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력발전소 퇴직 후에도 이런 재교육을 받고 나면 다른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14 기초지자체 공무원

---

나	이	30대 후반
성	별	남성
직	종	기초지자체 공업직

---

특    징    발전소 담당 업무는 3년째. 발전 허가, 관련 사업 지원 등을 추진. 관련 업무들이 나뉘어 있어 이해관계자들을 모으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음. 전담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음.





#기초지자체 공무원 #30대 #남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세수 감소, 인구유출 우려...해당 지자체간 공동대응

지자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통 시군의 경제과 내에 있다. 지자체 차원의 대응 계획 수립, 소규모 발전 인허가,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사업,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태안군은 경제진흥과 안에 에너지팀과 발전소 지원팀 2개 팀이 있고 보령시는 지역경제과 안에 에너지산업팀 한 곳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

40대 공무원 임 씨도 에너지 관련 팀에 소속되어 있다. 다른 지역 출신인 임 씨는 화학 관련 대학을 나와 시설관리 등의 일을 하다 공무원 공업직 시험을 준비해서 30대 초반에 합격했다. 공무원 공업직은 전기직, 화공직, 기계직으로 나뉘는데 지자체에서 화공직은 보통 상하수도 사업소, 전기직은 가로등이나 CCTV 같은 전기시설 관리 및 감독, 기계직은 기계설비 관리 및 감독 등을 맡게 된다. 임 씨도 맨 처음에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발령받았지만 일하다가 다른 부서를 거쳐 3년 전 에너지 관련 팀으로 이동하게 됐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아는 분야만 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자체 내에 공업직 자체가 소수여서 다른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발전 인허가는 산업자원부 업무다. 전기사업 허가는 설비용량이 3,000kw가 넘을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하고 충남의 경우 500kw 이하는 시군구에서 허가를 한다. 최근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전력생산도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관련 업무도 갈수록 늘어난다. 태안의 경우 풍력발전 인허가를 위해 풍향계측계를 설치해서 1년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해상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할 때 수해나 문화재, 해상교통에 위험은 없는지 기준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도 하고 있다.

## 세수 감소에 행정 공동대응, 지역경제가 더 문제

지자체가 탈석탄 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크게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와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인구유출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세수 감소이다.

"직접적으로는 지역자원 시설세,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본사 법인세 등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죠."

지역자원 시설세란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화력발전의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은 kwh(킬로와트시) 당 0.3원으로 이를 다시 도와 시·군이 3.5:6.5로 나눈다.

'기본지원 사업금'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으로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전전연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연간 지원금을 산출해 지자체와 발전본부에 각각 나눠준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가지고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 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는 교육, 학자금, 장학금, 교육 사업 등의 육영사업과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을 한다.

태안의 경우 1,2호기 폐쇄에 따라 자원시설세 약 10억 원이 감소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약 11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의 경우 2020년 말 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가 2년 앞당겨 폐쇄됨에 따라 지역자원 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7억 원이 감소했다. 이에 충남도는 긴급히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보전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2019년 6월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창립했다. 이를 통해 인천 옹진군,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강원 삼척·동해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진은 별도의 협의체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소속에 참여하고 있으나 석탄세율과 관련해서는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에 참여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이 국회와 정부에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이 포함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력은 kwh당 2원이고 원자력은 1원이니깐요. 화력은 0.3원이니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환경피해복구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인상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지방행정협의회 토론회에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처럼 석탄 화력발전 폐쇄지역 주변 지원법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된 세수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마을과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끝났다고 봐요. 개별지원은 안 되어서 마을별로 지원하는 것도 몇십 년 해왔더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한 것도 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면 단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젊은 사람들 찾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세수감소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고용악화와 인구 유출이다. 태안군은 10호기까지 폐쇄될 경우 2,000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령시는 인구 1,700명과 565명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태안이나 보령의 경우 발전소가 가장 큰 기업이고 당진시와 달리 여타 산업이 없어 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시적인 고용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발전소 오버홀을 공사할 때는 1~3개월 동안 외부인력도 많이 들어옵니다. 정확히 추산하기가 어려운데 1호기 당 오버홀 70일 동안 투입 인원이 하루당 400명으로 계산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먹고 자는 것도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 행정력만으로 부족...대안 찾을 민관 거버넌스 필요

지자체들은 석탄화력발전의 대안으로 태양광, 해상풍력단지 개발, 수소발전, 에너지 융복합 단지 개발 등의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와 별도로 태안군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광개토 대사업 추진이나 해양치유센터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보령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 보령형 뉴딜정책, 자동차 튜닝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보통 일자리 관련 팀에서 이뤄지고 있어 에너지 전환 이해관계자들을 모으고 설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직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곳도 있다. 당진시의 경우 이례적으로 기후에너지과라는 전담부서를 구성했다. 기후에너지정책팀, 기후변화대응팀, 에너지팀, 에너지자원팀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과장도 드물게 공업직 사무관이 맡았다. 에너지 관련 업무를 기후변화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행정의 방향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 6월 문을 연 당진시 에너지센터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된 에너지 중간지원조직으로 에너지 교육, 마을 에너지사업 컨설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갈등 해소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을 한다. 에너지전환 과정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계획 단계부터 의견을 들어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다.

지난해 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당진시 그린뉴딜 시민기획단이 만들어졌다. 시민기획단에는 환경운동단체부터 이통장협의회, 비정규직센터, 농업경영인회,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에너지전환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체까지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한다. 기획단은 두 달 여에 걸친 활동을 통해 10대 목표와 80여 개의 정책제안을 마련해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당진시에 전달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큰 틀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 지역신문 기자



---

나	이	40대 중반
성	별	여성
직	종	기자

---

특    징    귀촌했다가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중. 공론화에 지역신문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으나 신문사 사정상 현안 취재에도 인력이 빠듯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음.





#지역신문 기자 #40대 #여성

## "탈석탄 대안, 관 주도로만 추진되어선 안 돼"

지역경제 대책도, 공론화 장도 불확실한 지역 여건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만큼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지역신문 기자다. 사안에 따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전하고, 탈석탄에 대한 지역의 여론도 파악한다.

40대 중반인 조 씨도 한 지역신문의 취재기자다. 대도시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귀촌을 결심한 조 씨는 한동안 텃밭 농사도 지어보고 지역에서 단체 활동을 하며 지냈다. 그러다 국문학과와 전공을 살려 지역신문 기자로 취업했다. 지역신문마다 업무는 많고 보수는 적어 취재 인력이 수시로 바뀌지만 그럼에도 조 씨는 3년을 넘게 일하고 있다.

“힘들긴 하지만 지역 일들을 알아가는 게 재밌어요. 사안이 조금이라도 해결됐을 때 보람도 느끼고요.”

조 기자는 도심의 한 원룸에서 고양이를 키우며 산다. 기자 이전부터 취미 활동을 하면서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지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탈석탄 의제를 예전에는 환경적인 측면에 국한해서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다. 제각각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것도 알게 되어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생겼다.

“발전사들은 정부의 방향에 따라 선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죠. 발전사 사장이 연임을 목적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역 여론은 시시각각 변한다. 미세먼지가 부각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나쁘다고 말하다가도 지원금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시류에 따라 여론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근에서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 등 장사하는 사람들은 발전소가 폐쇄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폐쇄를 무조건 환영하지 않아요. 지자체는 환경오염 완화,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쇠퇴, 세수 감소 등을 함께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탈석탄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밭 등에 떨어진 화두가 됐고, 조기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 문제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마다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그에 따른 영향, 대책 마련 문제는 지역 정치인에게 중요한 사안이 될 겁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 “행정이 유치하려는 신산업, 주민이 볼 때는 불확실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자연 감소하는 정년퇴직자 수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고 인구유출도 크게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발전소에 일하는 젊은 사람들은 가족들이 주로 외지에 있고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별로 하지 않기에 지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많이 만난 조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당연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출신인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고향을 떠나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안이 뚜렷하지 않아 답답해합니다. 지역경제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발전사는 공기업이니까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납품이든 숙박업이든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업을 하는 쪽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다수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재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30기인데 제9차 국가전력기본 수급계획에 따르면 이중 14기가 2034년까지 폐쇄 예정이고 12기가 LNG발전소로 전환된다. 지자체들은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현재 킬로와트시(kwh) 당 0.3원인 수준에서 원자력



이나 수력과 비슷한 수준인 1~2원으로 올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세수보다 문제인 건 고용악화와 그에 따른 대안인 것 같아요.”

태안, 당진, 보령 지역 모두 발전사들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부발전이 합작한 (주)태안풍력발전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33만 평 부지에 8MW급 풍력발전기 5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태안군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중이고 무인 이동체(UV: Unmanned Vehicle) 랜드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보령에서는 중부발전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기술을 개발 중인 것을 감안해 그린 수소 기반 구축과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행정이 주로 유치하려는 산업이 미래기술이다 보니 주민들이 보기엔 불확실하죠. 지역 고용도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고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경제 쇠퇴,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신문에 따라서는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을 소규모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신재생 에너지가 지나치게 사업적 관점으로만 가다 보니 브로커가 끼어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기자는 재생에너지를 단지화해서 적극적인 산업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단지화나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예상 지역은 큰 배도 다니지 않고 어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상관광농원, 인공어초사업, 풍력발전단지 감시 등의 사업을 연계하면 선박 주의 고용이나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염전이나 염해지에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 중인데 넓은 부지라면 석탄화력발전소 회처리장이나 간척지에도 가능하겠죠. 어렵게 일군 간척지에 다시 태양광을 하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따라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행정이 설득해야 할 일일 겁니다. 발전산업이 발달되고 항만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제조업 단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풍력과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제조업 단지를 개발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가령 해상풍력 발전기를 국내업체가 개발한다면 제조공장을 우리 지역에 설립할 수 있어야겠죠.”

새로운 산업단지 유치 같은 논의의 틀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일리는 있어요. 우리 지역은 농업, 수산업 등 1, 2, 3차 산업이 공존해요. 기본적으로

지역산업을 육성시키는 틀을 이번 기회에 가꾸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지역화폐와 같은 논의를 더 활발히 해서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거죠.”

## 누가 공론장을 만들 것인가

조 기자는 지역마다 탈석탄에 대응하는 미래 정책을 만드는 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논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가 대체 산업을 유치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골몰하는데 대안 모색이 되려면 공청회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태안이나 보령이나 대안이 되는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주민들과 먼저 논의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정책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요. 잘못 추진되어도 정확히 상황을 모르니 견제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공론화에 익숙하지 않고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오랜 습관도 문제다.

“지역사회의 보수성에 다들 길들여진 것 같아요. 어쩌면 주권자 의식이 약화된 건 아닐까요?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민사회가 공론을 주도하자니 실무력이 없다. 발전사가 주최하면 그들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시민사회나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참여를 꺼린다. 당진시의 경우 에너지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시민기획단 활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어쩌면 지역신문이 공론화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인력이 적고 여력이 없기는 합니다. 취재역량도 부족하고요. 그래도 지역의 오래된 신문이니까 공론화해볼 여지는 있겠죠.”



16

청소년



---

나 이 16세(중학교 3학년)  
성 별 여성

---

특 징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고향에서 계속 살고 있음. 중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의 환경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서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연합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보고 실천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음.





#청소년 #10대 #여성

## "내 고향의 환경오염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환경동아리 활동으로 화력발전소 실태 파악...청소년 직접 행동

올해 중학교 3학년인 김 양은 태어난 고향에서 줄곧 자랐다. 부모님, 2살 터울의 남동생과 함께 산다. 근거리 농촌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그마한 텃밭을 일구면서 살고 계신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이다. 장래 희망하는 직업은 선생님인데,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코로나 때문에 입과 코를 덮는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화력발전소가 있는 이곳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날이 잦았다. 김 양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위험인 날이 많으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때부터 자주 목이 따끔거리며 아팠어요. 남동생은 원인은 모르겠지만 알레르기가 있어서 호흡기 질환에 특히 민감해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면 어머니는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저희에게 꼭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몇 번을 반복하며 당부했어요. 가까이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것 같아 걱정이예요.”

초등학교 시절 김 양은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즐겼다. 몸을 움직여 친구들과 소리치고, 웃고 떠들고 놀았던 그 시절이 이젠 추억이 되었노라고 회상한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실외에서 맘 놓고 놀 수 없었다. 가끔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여름에는 마스크를 쓰면 땀이 차고 얼굴에 붉은 발진이 돋기도 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낀 날은 고무줄 때문

에 귀에 통증이 느껴져 불편했다.

## 뒤늦게 알게 된 환경오염 실체 “송전탑 근처 사는 할머니 걱정”

지역의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이유를 중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환경이라는 주제가 김 양을 둘러싼 일상 속에서 서서히 보이게 되었다.

중학교에서 4개의 환경 관련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김 양이 처음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1학년 때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에 동아리는 관심 밖이었다. 환경 동아리 선배들은 김 양과 같은 후배들에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며, 지역의 환경 이슈를 재미있는 게임과 퀴즈로 참여시켰다. 이때부터 김 양은 환경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기회가 되어 기후변화, 쓰레기, 숲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김 양이 참여하는 환경동아리 중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동아리가 있다. 기후변화 위기라는 주제를 두고 동아리 담당 선생님은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다. 정해진 답은 알려주지 않았다. 김 양은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야 했다. 처음에는 어렵고, 잘 몰랐던 것들이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니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답을 찾다 보니 지역의 특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낙후된 농어촌 지역이었다.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바다를 끼고 있는 입지조건때문에 1990년대 말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 중 한 곳이 되었고 제철, 금속 등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급속하게 산업이 성장했다. 중화학공업, 대형 산업,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산업이 자리 잡으면서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이사 가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흘려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들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계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장이 여기 있으니 이사는 말처럼 쉽지 않았



어요.”

김 양은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석탄화력발전소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다. 단체로 학생들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을 직접 탐방하며 눈으로 환경오염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커다란 트럭들이 이동하면서 검은 분진들이 날렸고, 미세한 가루들이 날려서 마을의 농작물과 흙, 빨래에 내려앉았다. 발전소 가동 이후 체내 중금속 문제, 스트레스, 호흡기 질환으로 마을 사람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커다란 송전탑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음을 일으키고, 암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김 양은 견학하기 전에는 송전탑이 어떤 용도인지 몰랐다면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차를 타고 지나칠 때 뽀족하게 생긴 송전탑을 본 적은 많았지만, 그게 송전탑인 줄 몰랐어요. ‘에펠탑처럼 생긴 것이 있네’ 정도로 가볍게 지나쳤어요. 송전탑이 뭘지 알고 나니, 농촌 마을에 사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오르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웬지 제 몸이 아픈 것 같아 예민한 하루를 보내기도 해요. 목숨이 돈보다 소중한걸요. 건강을 해치는 석탄화력보다는 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지역 환경문제 해결 위해 직접 행동하는 청소년

김 양은 환경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교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보드게임을 직접 만들어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배지에 환경 구호를 적어서 가방에 매달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지역의 환경 이슈들을 접할 수 있었다.

김 양은 환경 동아리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실천의 장을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정책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토론하고, 실천방법을 모색했다. 김 양은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학교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자극이 되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타 학교 학생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청소년들의 책임의식을 느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실천적인 행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며 직접 주민들을 만나며 기후변화 위기를 알렸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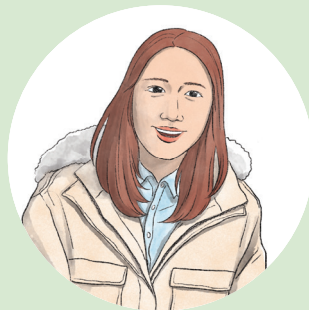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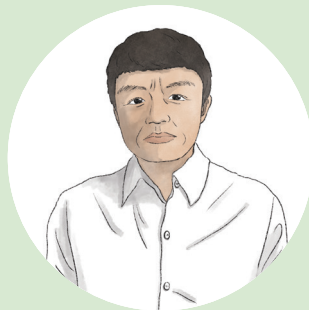
구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시청을 비롯해 곳곳에 직접 부착하기도 했다. 환경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하지만, 김 양은 그보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탄화력을 한 번에 모두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전기를 만들어야 하고, 많은 양의 전기 생산을 우리 지역에서 해결했는데 한꺼번에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현실적인 방안은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석탄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해요. 태양력, 풍력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우리 지역에는 주변에 바닷가도 많으니 조력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양은 ‘지구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며 청소년도 지역의 환경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른들이 보기엔 다소 미숙해 보일지 몰라도 청소년들도 사회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만 하기보다는 하나의 실천을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환경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발판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 3

## 대안을 꿈꾸다

- 17\_사회적경제 활동가
- 18\_도시재생 활동가
- 19\_마을만들기 활동가
- 20\_마을리더가 된 광부



# 사회적경제 활동가



나 이 40대 초반  
성 별 남성  
직 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장

특 징 지역 출신으로 현재 부모님이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경험이 있음.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준비하는 청년, 중장년들의 멘토 역할을 함.





#사회적경제 활동가 #40대 #남성

## "고령화, 척박한 지역여건...10년 이상 내다봐야"

청장년층 유입 기반 필요, 기금이나 사회적 금융도 대안

충남의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주 씨는 얼마 전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 발전소 폐쇄가 시작되면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걱정이 많으셨다. 어머니는 최근 발전소 주변 상인회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회적경제 쪽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어머니께 상인회 분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걱정이네요. 이미 상권이 죽어 가고 있어서 단지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만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시겠죠. 협동조합으로 뭉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 할 텐데, 상인 대부분이 60~70대 고령이어서 솔직히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주 씨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한숨을 지었다. 예전에는 화력발전소 상주 직원들만으로도 식당 운영은 잘 됐고, 발전소 전체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오버홀 기간에는 외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돼 상권 전체가 북적북적했다. 발전소 폐쇄가 시작된 이후 인근 상인들은 자신들의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나마 상인회 임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고령의 상인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주 씨는 “나이 70세가 넘으면 대부분 ‘하는 데까지 식당 하다가 접지 뭐’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얼마나 모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단 상인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발전소 협력업체 직원들 대부분은 지역출신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주 씨는 10년 넘게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며 청년과 중년층의 창업을 지원했지만, 자신의 고향을 위해서는 퍼뜩 떠오르는 대안이 없다.

“일자리와 소득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수익이 나오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공동 자산을 형성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이런 과정을 이끌고 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 고향은 사회적경제 토양이 척박합니다.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사회적경제 분야는 중간지원조직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숫자가 적어요.”

### 주민 조직화부터 창업까지 세부적인 지원계획 필요

탈석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상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기대를 거는 경우가 많다. 자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와 다르게,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약자인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비즈니스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는 원칙적으로는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현실에 반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방식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경험, 지원 체계 등 모든 면에서 지역 기반이 척박하다. 그래도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정책을 제대로 설계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주 씨는 충분한 시간과 재원,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그룹을 4~5년 만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계획을 짜야합니다. 주민을 조직화해서 경제조직으로 발전해나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품이 많이 들어요.”

그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나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처음 2~3년 동안은 주민들이 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 도시재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받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공동체 활동 중에서 비즈니스 모



델이 나올 만한 아이템을 찾고 이후 1~2년 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을 준비한다. 이렇게 4~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사회적경제가 가능한 토양을 만들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주민 조직이 선별되면 본격적인 창업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공공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공공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시점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지원하고, 각종 사회적경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때 의미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하려면 기나긴 과정을 이끌어 갈 만한 인재를 먼저 양성해야 한다. 주 씨는 “현재 고령화된 주민들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년층이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지역의 사회적경제에 유입되어야 한다”며 “이들이 초기 3~5년 동안 주민들을 조직하며 버틸 수 있는 유입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생계가 보장된다면 사회적경제로 들어오는 그룹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측면에서 주 씨는 지역의 청장년 활동가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제까지 실현해보지 못한 실험인 만큼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이런 활동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면 새로운 그룹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들어오기 힘들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40대 노동자가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 지역녹색은행의 가능성

충남도는 2016년부터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영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보장했다. 일자리를 잃은 석탄화력발전소 중장년 노동자들의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면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규모가 큰 기금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탈석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노동자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2021년 2월에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2025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지원 프

로그램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 의사를 밝혔고, 국가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을 제안할 계획이어서 기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금융’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전략 및 사업구상’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시군단위로 확대하면서 지역녹색금융 활성화까지 검토되고 있다. 지역녹색금융은 지역사회의 풀뿌리 조직들이 그린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금융’ 방식이다. 세계적으로도 ‘녹색사회적금융’이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이 시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을 녹색사회적금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기금과 사회적금융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노동자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재원 기반이 된다. 하지만 사회적금융에 대한 지역의 역량과 경험도 부족하다. 충남에서는 서해안 유류피해 관련 기금을 바탕으로 재단을 설립해 사회적금융 방식으로 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한 지역에 400억 규모의 기금이 있었어요. 웬만한 신탁의 자산과 맞먹는 액수죠. 그 기금을 바탕으로 지역화폐나 일반 서민들을 위한 금융 사업, 주민들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 지역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어요. 그 기금을 시민 주도로 운용할만한 주체도 없었고요.”

주 씨의 말처럼 ‘이제까지 실현해보지 못한 실험’이다. 탈석탄 역시 우리나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결국 실험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 실현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탈석탄에 대처해가면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역량이 높아져 지역사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전문가, 현장활동가, 주민, 노동자,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 연구하고 실험하며 답을 찾아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요?”



# 도시재생 활동가



나 이 40대 후반  
성 별 여성  
직 종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특 징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큼.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예비사업부터 뉴딜사업까지 꼼꼼히 챙김. 지역 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영역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음.





#도시재생지원센터 #40대 #여성

## "지속 가능한 대책 찾으려면, 주민 역량강화가 우선"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모델로 한 '지역관리기업'의 가능성

최근 들어 낙후된 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충남 지역 곳곳에도 낡은 구도심 골목마다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래된 주택단지를 모두 허물고 고층 아파트만 짓고 끝나는 재건축이나 뉴타운 사업과 다르게,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 자원을 발굴해 사회문화, 경제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시재생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낙후가 예상되는 지역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충남의 한 지역에서 도시재생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 씨에게 물었다.

“개념적으로는 도시재생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은 주민 주도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지역은 인구나 세수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어마 무시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기존에 폐광 지원금이나 화력발전소 피해 지원금처럼 나눠 먹기식으로 쓰다 보면, 거기에 의존성만 커집니다. 지원이 끝나면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고, 지역에서도 주민 주도의 지역 발전이라는 도시재생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해요.”

이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시작된 지 5년째 접어든다. 그동안 예비사업을 거쳐 중심시장지형, 일반근린형, 우리동네 살리기형 등 3개 지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도시재생은 전문가나 공무원이 정하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과정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주민 역량 강화에 집중해왔

다.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기획한 사업을 실제로 실험해볼 수 있도록 주민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도시재생은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다음, 주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후 창업이나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죠. 탈석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도시재생 방식을 적용하려면, 역시 주민들을 교육하고 R&D 기반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창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겁니다.”

한 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크게 의존한다. 발전사 본사가 위치하고 많은 주민들이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한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온 노동자들은 원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나면 원룸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된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바로 길 건너에 원룸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어요. 공실이 많이 생겨서 공동화가 진행되면 빌라를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공동홈이나, 세어하우스, 청년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형성된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정의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다. 지원사업이 끝나도 주민들 스스로 도시재생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지원사업으로 마련된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풀어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주민조직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대체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되는데,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윤을 배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도시재생의 경우 마을관리협동조합에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및 무상임대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자원 연계 및 지원 △5,000만원 수준의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도시재생기업을 모델로 한 '지역관리기업'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전략 및 사



업구상' 최종보고회 자료에는 지역사회 지원전략 중 하나로 '지역관리기업 육성'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역관리기업은 지역 내 청소, 건물관리, 돌봄 등을 지역공동체 및 지역기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맡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모델은 △주택관리 서비스 △집수리 서비스 △사회적주택 운영 △에너지자립 사업 △마을상점 △태양광 발전 등이 있다. 에너지 자립 및 태양광 발전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연결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한 씨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안착되기에는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아직 실험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한 거라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전국적으로도 성공적인 모델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인적 자원이 많은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몇 군데에서 추진하지만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충남 지역 곳곳에서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준비하지만, 이제 교육을 통해 배워가면서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요. 걸음마 단계인 거죠.”

한 씨가 도시재생센터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도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이 가장 큰 과제다. 커뮤니티센터 착공을 앞두고 향후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구조가 필요할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향후 커뮤니티 공간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험해보는 '주민제안 기획공모'도 진행됐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커뮤니티 건물 관리 위탁 등 비영리사업만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 한 씨는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자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지원이 끝난 후 운영이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속 가능한 탈석탄 대책 핵심은 '주민 역량강화'

한 씨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가점이 주어진다”며 도시재생과 정의로운 전환의 연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폐쇄로 실직한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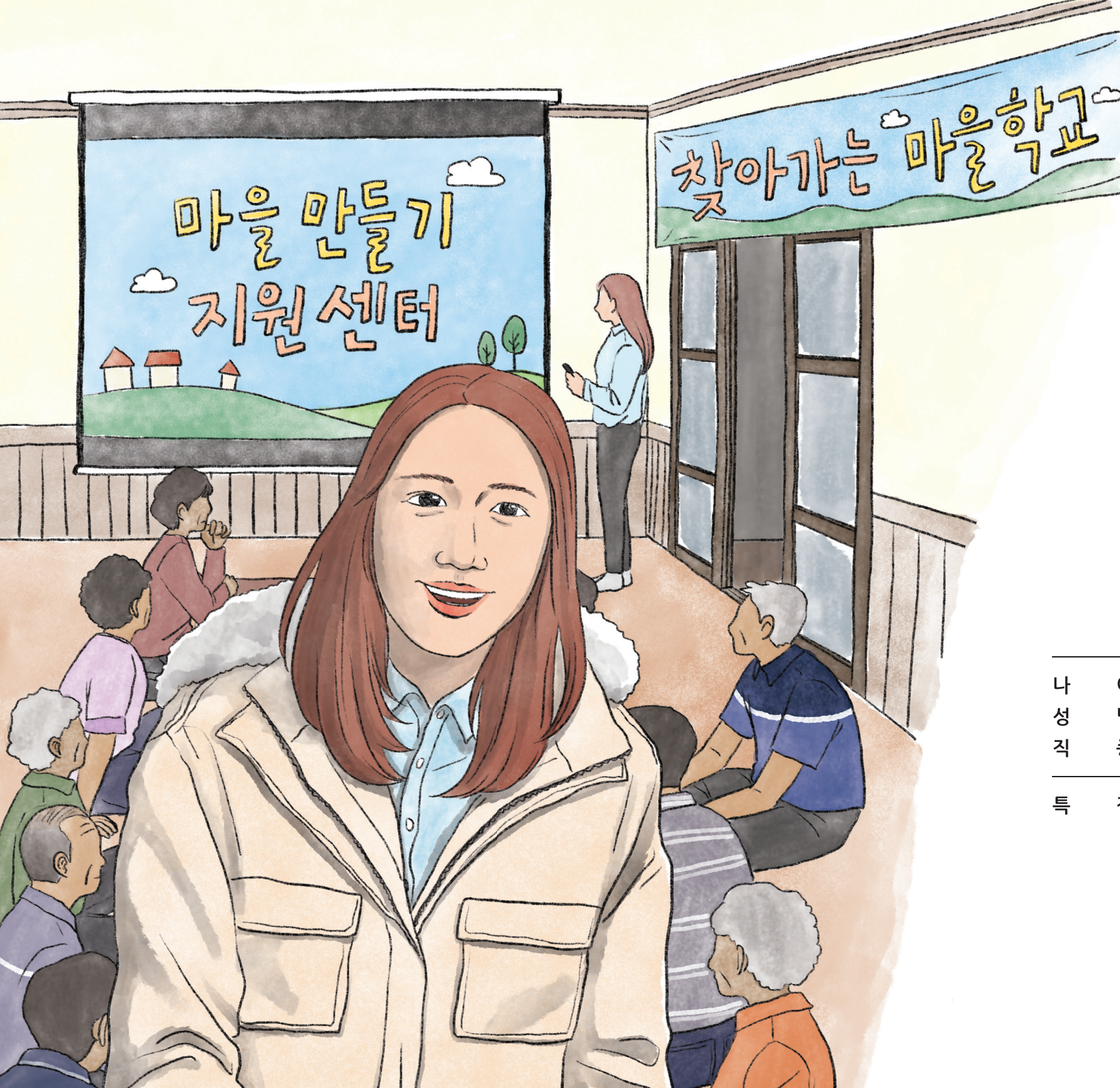
“지금은 청년 창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면 랩시설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거기서 창업아이템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니어 창업 지원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쪽은 이 분야 산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겠죠.”

창업 지원을 하려면 지역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사람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한 씨는 “이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된 지 5년 차에 접어든다”며 “그동안 교육과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야 지역에서 인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육성된 주민들이 도시재생 주민활동가로 참여하기도 한다. 그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든, 도시재생이든,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역량에 달렸다”며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이 끝나도 지역 경제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인재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과 노동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지역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 지역에는 탈석탄과 관련된 네트워크도 없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도 없어요. 함께 모여서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에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지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아쉬워요. 그동안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만 피해 보상금을 주고 말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화력발전소 폐쇄는 우리 지역 전체의 문제입니다.”



# 마을만들기 활동가



나 이 30대 후반  
성 별 여성  
직 종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특 징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쌓고 5년 전부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맡아 농촌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돕고 있음. 마을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토론을 하고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





#마을만들기 활동가 #30대 #여성

##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지역콘텐츠로 활용"

폐광촌 역사 활용한 마을만들기 활발...주민 인식 전환이 우선

윤 씨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석탄과 연관이 깊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석탄산업은 반세기 넘게 이어졌고 1995년 모두 폐광될 때까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 바탕을 석탄화력발전소가 이어받았다. 탄광은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로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기 시작해 지금까지 10기의 발전시설이 건설됐다.

“이 지역에서는 한 다리만 건너면 석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과 연결돼요. 탄광에서 광부로 일했던 아버지의 아들이 발전사 본사 직원이고, 삼촌은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하는 등 친인척 일가 중에 몇 사람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화력발전소에서 다녔다는 뉴스가 나오면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인지도 알게 되죠.”

윤 씨는 충남의 한 지역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먹고 살 길이 사라지면서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을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동체가 사라지는 일이 농촌마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쇠퇴해가는 농촌의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마을만들기’ 운동은 종합적이다. 하나의 공동체가 지속가능하려면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의 인식을 바꿔야 하고, 마을 공간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성을 키운다. 지역자원을 발굴해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하고 경제사업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낸다. 도시재생의 짧은 역사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는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경험이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영역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마을에 지원금이 들어가면 갈등과 분열을 겪고, 큰 건물을 지어놓고 지원이 끝나면 텅텅 비어 방치된 곳도 많다. 그런 어려움을 거쳐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든 마을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동이 고도화되면서 마을기업, 영농조합 등을 통해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죠.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귀촌할 테니까요. 그런데 경제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힘들게 공동사업체를 꾸려도 수익이 저조하구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피해를 받는 지역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면 지속가능한 경제사업을 만들어야 할 텐데, 마을만들기 사례를 보면 지역공동체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아이템 발굴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어서, 비즈니스를 실현할 젊은 사람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장기적인 비전 찾는 주민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마을에는 피해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됐지만 대부분 나눠주기 식으로 소모됐다. 개별적으로 나눠주지 않고 소득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지원금의 경우에도 이렇다 할 사용처를 찾지 못했다. 경제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해 대부분 농기계를 사거나 마을안길을 포장하고 배수로 증설하는 데 사용한다. 주민들이 추진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윤 씨는 마을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 업무지만, 가끔씩 화력발전소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마을 주민들도 있다.

“마을 주민이 문의하면 컨설팅을 해주기는 해요. 그 자금으로 소득 창출할 방법을 물어보는데, 함께 고민하면서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죠. 지원금으로 농기계만 샀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마을도 있어요.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동을 계속 하면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뀐 마을은 좀 달라요. 예전에는 예초기를 40개씩 구입해서 똑같이 나눠줬는데, 집집마다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잘못된 거



구나 깨닫게 되죠. 마을에서 공동으로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그것을 임대하면서 마을기금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석탄화력발전소 지원금을 연결한 사례도 있다. 보통 마을만들기 사업 초창기에 마을의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포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 마을은 발전소 지원금으로 농기계 임대 창고를 지었다. 임대 수익은 농기계 수리비로 활용한다. 마을에 들어오는 자금을 주민들에게 그냥 나눠주지 않고 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마을기금을 모으는 곳도 있다. 소모성 사업으로 지원금을 소진하는 마을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세워서 실현하는 마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윤 씨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제 탈석탄으로 먹고 살 것도 없고, 나는 망했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희망으로 전환해야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함께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전문가가 돕고, 예산이 투입되는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인식 전환 없이 돈이 먼저 들어간 마을은 큰 건물 같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주민들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지 않은 채 하향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건물을 짓고 나면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이나 지원센터에 의존하게 되죠.”

### 발전소 폐쇄는 석탄산업 ‘중점’, 지역관광 콘텐츠로 활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지역의 긍정적인 가치로 활용할 수도 있다. 탄광으로 시작된 이 지역의 석탄산업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 여기에는 탄광촌과 광부들,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러한 스토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미 우리 지역에는 폐광 이후 건립된 석탄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역사가 더해지면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의 전체 역사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는 지역의 관광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 지역에도 폐광촌이 된 마을이 과거 석탄광산과 광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면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는 곳이 많아요.”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방안 중에 ‘복원 재생 전략’으로 에너지 전환 지역의 ‘에코뮤지엄 추진단’과 ‘전환지역 아카이빙 구축’이 검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석탄 산업 유산을 관리하면서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폐쇄되기 전부터 관련 자료를 발굴해 기록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상과 정체성도 만들어갈 수 있다. 보통 ‘에코뮤지엄’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산업, 생활 방식을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발전소, 노동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기록하고 책자, 전시,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담아내는 아카이빙 활동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윤 씨는 민간의 마을만들기 영역의 경험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책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통합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을만들기센터나 도시재생센터는 이미 기존 사업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이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민간의 경험이 부족한 것도 걱정이다.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는 아직 걸음마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행정조직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지자체가 폐광지원금으로 호텔, 콘도 사업을 진행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다. 결국 민관이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방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상권활성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군 단위 지역활성화 재단’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충남에는 청양군과 부여군, 서천군에 이와 관련된 재단이 설립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인 태안군, 보령시, 당진시에도 각 분야별 중간지원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재단 설립은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다.



20

## 마을리더가 된 광부

나 이 60대 후반  
성 별 남성  
직 종 마을 이장

특 징 20년 동안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로 지내다가, 마을 이장을 20년째 역임하고 있음.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탄 광이 문을 닫았고, 마을이 쇠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음. 마을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이장을 맡았고, 마을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게 되었음. 마을만들기 사업 리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음.





#마을리더가 된 광부 #60대 #남성

## "폐광 이후 절망 가득...이제는 서로를 신뢰해요"

지원금만으로는 도움 안돼, 주민의식 전환 밑바탕 돼야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과거 석탄합리화 정책은 실패했어요. 그런 지원들이 완충장치라고 말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충남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소식을 들은 이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1980년대 탄광 광부와 폐광촌을 지원하던 석탄합리화 정책의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은 1970년대 탄광이 자리했던 곳이다. 탄광산업의 전성기에는 300가구, 1,200여 명이 살았다. 폐광이 되면서 대부분 사람은 마을을 떠나고, 현재 60가구 정도만 마을에서 지내고 있다. 이 마을에서 20년째 이장으로 활동하는 이 씨의 고향은 경상도다. 광부 일을 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이주했다.

“저희 마을에는 원주민이 거의 없어요. 광부 생활을 하기 위해 시내에서 우리 마을로 온 분도 있고, 서울,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왔어요. 처음에 집이 없잖아요. 하룻저녁에 돌담 쌓고 나무 걸치고 비닐 위에 돌맹이를 엮었어요. 그게 저희들 집이었어요. 주거환경이 말도 못 할 정도로 열악했어요. 집안에 화장실은 상상도 못 했죠. 길가에 수십 개의 화장실이 있어서 여름철이면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가 나서 고약했죠.”

###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광부

이 지역의 탄광은 1948년 본격 개발된 이래 70여 개의 탄광에서 연간 최대 150만 톤까지 생산되었다. 우리나라 석탄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으며, 여기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만도 5,000여 명(가족 포함 2만 명)에 달해 지역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

다. 이 씨도 광부 일이 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사명감에 비해 광부의 근로조건은 열악했다. 이 씨는 자신의 일터인 ‘막장’을 떠올리며 결국 눈물을 흘렸다.

“드라마를 보며 사람들이 ‘막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막장’이 저희 일터를 말하는 거예요. 수 백 미터, 수 천 미터 땅속으로 들어가서 좁은 갱도굴을 지나 더 이상 들어갈 때가 없는 그곳을 ‘막장’이라 불러요. 매일 갱도 속으로 들어가 햇빛도 보지 못한 채 먼지 구덩이에서 석탄을 캐는 게 저희 일이에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온도, 습도가 높아 마스크를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콧속으로 탄가루가 들어가고, 폐에도 쌓여 진폐증 환자도 많았어요.”

광부에게 술은 마음을 달래주었던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이 씨는 전했다. 갱도 속으로 들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압박감에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술을 마셨다. ‘이제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에 마음이 놓였다가도 동료가 좁은 갱도 속에서 생매장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미어졌다. 매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일상을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평생 탄광 일만 하던 마을 주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 씨는 어느 날 자신이 20년 동안 일했던 광산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 가정용 에너지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석탄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석탄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 마을은 탄광 이외에 논이나 밭이 없어 생산적인 기반이 전혀 없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사라지자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다. 당초 정부는 탄광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석탄합리화정책으로 19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광산이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광부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실업자가 됐어요. 평생 석탄 캐는 일만 하던 사람들이 먹고살 길이 사라지니, 다들 마을을 떠났어요. 마을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점심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 저녁이 되면 만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돈을 벌지 못한다는 슬픔보다는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는 패배감이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랜드로부터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해당 지자체에 지원되었지만, 이 씨를 비롯해 폐광촌 주민들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폐광기금은 폐광된 마을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자금이 아니에요. 이 지역의 관광 산업을 위해 사용되었어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마을에 주는 돈은 단돈 1원도 없었어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금을 받으라고 하지만, 평생 석탄만 캐던 사람들이 서류를 꾸밀 수 없잖아요.”

### 주민들 간의 신뢰 회복이 마을의 발전

폐광이 된 이후 이 씨는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때의 마을은 황폐했다.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며 버려진 빈집은 폐가가 되어 흉물스럽게 변했고, 마을 곳곳에는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로 냄새나고, 지저분했다. 주민들은 예전 광부일 때 마음을 달래던 습관으로 점심부터 술을 마셨고, 저녁이면 마음속 응어리가 터져 애꿎은 사람을 붙잡고 시비를 걸다가 싸우는 일이 빈번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씨는 그때부터 마을 이장을 맡으며 마을을 돌보기 시작했다.

“2001년에 마을 이장이 되었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마을이 지저분하니 깨끗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을 방송을 해서 함께 청소하자고 알렸어요. 2명이 나왔어요. 돌려보내고 저 혼자 예초기를 빌려서 풀을 깎기 시작했어요. 저도 예초기는 처음이었어요. 대충 배워서 매일 그렇게 혼자 마을 곳곳을 깎았어요. 혼자 청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한두 명씩 함께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마을 청소하자고 방송하면 30분 전부터 주민들 대부분이 모여 청소해요.”

과거에는 지저분한 마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지금은 깨끗한 마을 선진 사례로 꼽히면서 견학을 오는 모범 마을이 되었다. 마을에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이 많이 생겼지만, 이 씨는 처음부터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는 마을 사업을 경계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마을의 인구도 줄고, 지역 경제도 침체될 것은 분명해요. 완충조치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마을에 준다고 마을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만 일으켜 그동안 지켜왔던 공동체도 와해될지 몰라요. 그만큼 지원금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야 해요. 건물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 마을 사업의 기초는 주민 교육입니다.”

그는 정부의 지원 정책보다 앞서서 주민이 직접 출자한 비용으로 마을 소득 사업을 시작했다. 주민들을 주체적인 참여자로 세우기 위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지만 직접 출자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사업취지는 좋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주민들 갈등은 수시로 일어났다. 하지만 직접 출자해서 만든 사업이었기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 의지 덕분에 지금까지 마을 소득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 지원금으로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마을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건물은 그럴듯하게 짓고, 이후 주민 갈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렵게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것이 되고, 애정이 생기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요.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주민들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함께 해서 그런지, 전우애 같은 게 있어요. 주변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씨는 책상 위에서만 하는 회의만으로는 갈등을 풀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함께하는 사업을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마을을 청소하고, 꽃을 심고, 인형극을 하고, 소득사업을 하고, 공동홈을 운영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마을 사업을 통해 보여지는 외부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저희 마을을 찾아와요. 사실 정말 중요한 주민들 간의 신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마을 사업을 하며 울고, 웃었던 그 시간 속에서 서로에 대한 불만은 녹아내리고, 신뢰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마을 발전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 참고자료

## [보고서]

- 충남연구원(2021),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 에너지전환 타당성 연구(2차년도) 최종보고회(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전략 및 사업 구상) 발표자료집
- 한재각·정은아(2020), (사)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탈석탄 예정지역의 이해관계자 분석과 사회적 대화 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2020),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2019),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보고서
- 태안화력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팀(2019),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 주영수 외(2019), 국가인권위원회, 석탄화력 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립해양박물관(2019), 해양분야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평택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2018), 시민이 쓰아올린 작은 공, 충남시민사회사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2016), 시민과 함께 길을 걷다, 충남시민사회사

## [언론]

- 오마이뉴스(2021.3.24), 화력발전 밀집한 충남, ‘탈석탄’을 위한 5가지 전략
- 뉴시스(2021.3.19), 文대통령 “2034년 충남 화력발전 12기 폐쇄…일자리 23만개 지원”
- 비즈니스포스트(2021.2.18), 중부발전 수소연료전지발전 신기술 도입
- 뉴스스토리(2021.2.1), 보령시의회, 보령화력 5.6호기 대체건설사업 정책협의회 가져
- 디트뉴스(2021.1.31), 태안군, 신해양도시 신성장동력 사업 박차
- 에너지경제신문(2021.1.26), 태양광·풍력 등 재생E ‘외면’…탄소중립 역행
- 당진시대(2021.1.22), 석문개발위 올해 예산안 28억
- 에너지신문(2021.1.4),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충남형 그린뉴딜, 새로운 표준 되도록 노력”

- 뉴스스토리(2020.12.29), 보령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 충남넷(2020.12.22), 지구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 한겨레신문(2020.12.14),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화력발전 도시’ 당진의 담대한 도전
- MBC(2020.12.6), 17조 원,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
- 일렉트릭파워 저널(2020.11.15), 중부발전 협력업체 가족 ‘아빠일터 둘러보기’
- 오마이뉴스(2020.11.14), 그린뉴딜, ‘녹색시민은행’으로 풀어가자
- 해운산업신문(2020.10.5), 노후화력발전소 폐쇄조치로 하역근로자 생계 잃어
- 조선비즈(2020.10.4), ‘석탄’ 제때 못내린 발전사들 체신료만 1000억원
- 한겨레(2020.9.10), 석탄을 넘어서
- 연합뉴스(2019.12.19), 발전소 석탄운반선에 전기 공급해 미세먼지 연간 285t 줄인다
- 환경운동연합(2019.11.5),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의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 굿모닝충청(2019.7.29), 태안화력 1-4호기 폐쇄되면 1000명 떠난다
- 경인일보(2018.11.21), 바다가 들려주는 인천이야기44 인천항운노조
- 오마이뉴스(2018.3.30), 왜 당진에 석탄화력이 밀집해 있을까
- 중앙일보(2017.4.12), 어민도 시민도 “반대”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역풍 맞아
- 한겨레(2017.6.13), 낡은 석탄화력 폐쇄로 지역주민 고통 더나
- 당진신문(2017.6.5), 발전소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 협상 시작
- EBS(2013.5.29~30), 극한직업 ‘석탄화력발전소 24시’
- 강원도민일보(2010.8.13), 석탄산업합리화 시행 그 후
- 보령신문(2010.8.13), 보령광업과 석탄합리화
- 해운산업신문(2008.11.5),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 김정주 위원장 인터뷰

## [기타]

- 유튜브(2020.9.30), ‘현직자 썰폰다’ 발전소 화학직 인터뷰 1,2편
- 중부발전(2020), 채용공고문
-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홈페이지 재생사업분야, 업무분장표
-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홈페이지 조직도와 업무분장표
- 네이버, 발전사 협력업체 직업 Q&A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스무 가지 목소리

충남 탈석탄 이해관계자 가상인터뷰 사례집

발 행 일 2021년 4월 23일

발 행 처 충남연구원([www.cni.re.kr](http://www.cni.re.kr))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14

기 획 총 괄 정명진

그림/디자인 주신애

작 가 안현경, 정명진, 홍순영

제 작 (주)지역콘텐츠발전소

<비매품>

\* 책자 제작을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관계자, 충남 지역 주민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